

2021
가을

생협 평론

44

길잡이	호모 코오퍼런스(Homo Cooperans)를 위하여 — 김찬호(편집위원장)	4
------------	---	---

협동조합의 정체성

[좌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말하다	14
-------------	----------------	----



김선화 김이경 신재민 이가람 이상윤(사회)

특 집	ICA 세계협동조합대회와 협동조합의 정체성	57
	— 최찬호(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ICA-AP 사무총장)	
	협동조합 정체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72
	— 김형미(상지대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와 정부	86
	— 최혁진(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는 한국 생협의 실천	96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 김아영(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아이쿱펠로우 연구교수)	
	이행 전략과 협동조합 연대 전략의 연계	109
	— 박강태(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해피브릿지협동조합 고문)	

기간 2021년 가을 제44호 **퍼넌탈** 2021년 9월 23일 **퍼넌이** 한글회 편집위원 강윤경, 김아영, 이은정, 조현경, 주세운, 전성욱
 편집위원장 김찬호 코디네이터 최장선 **퍼넌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등록번호** 구로, 바00038 **등록일** 2016년 4월 5일
 주소 (0731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gmail.com **디자인**
편집 잇다 **인쇄** 아람P&B **ISSN** 2093-9876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서 문의 (주)알마**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4길 5-13,
 3층 전화 02-324-3800

이슈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향해 :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의 지치지 않는 도전 —조유성(생활클럽 바람의 마을 사업본부, 치바사회적연대경제연구소 연구원)	124
	Non-GMO 표시 제도의 신기원을 열다 : (주)밀크쿵 Non-GMO 표시 시정명령 취소 판결의 의의 —조제희(조제희법률사무소 변호사, 아이쿱생협연합회 고문변호사)	142
생협 zoom in	달팽이 집 —김성광(작가)	152
기획 연재	주요 개념 길라잡이 사회적 가치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54
서평	사회와 연대하며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아이쿱생협 : 김선화 · 신효진, 《윤리적 소비에서 공정무역마울운동으로 : 아이쿱 이야기》 —천경희(가톨릭대학교 사회혁신융복합전공 부교수)	165
	제3섹터를 헤매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자끄 드푸르나마르뜨 니센 외, 《사회연대경제 : 1 토대》 —주세운(《생협평론》 편집위원)	169
협동조합 소식	‘유럽협동조합혁신상’으로 협동조합의 공헌을 알리다 —이주희(세이프넷지원센터 국제팀)	174
청년의 소리	협동조합의 더 깊은 정체성과 협동조합 생태계 구상 —김윤권(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178

길잡이

김 찬 호

편집위원장

호모 코오퍼런스 Homo Cooperans 를 위하여

생명은

— 요시노 히로시 吉野弘

생명은

자기 자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듯하다.

꽃도

암술과 수술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곤충이나 바람이 찾아와

암술과 수술을 중매한다.

생명은 그 안에 결핍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존재로부터 채워 받는다.

세계는 아마도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

그러나 서로가 결핍을 채운다고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흩어져 있는 것들끼리

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는 관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도 허용되는 사이

그렇듯 세계가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왜일까.

꽃이 피어 있다.

바로 가까이까지

곤충의 모습을 한 다른 존재가

빛을 두르고 날아와 있다.

나도 어느 때

누군가를 위한 곤충이었겠지.

당신도 어느 때

나를 위한 바람이었겠지.

텔레비전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는 클리셰(판에 박힌 대화, 상투적인 표현)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애인이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성에게 친구가 질책과 경고를 건넨다. “너 이러지 마. 이러는 거, 너답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거의 항상 똑같이 반문한다. “나다운 게 뭔데?”

단지 생존과 번식에만 매달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저마다의 정체성(아이덴티티)을 가지고 살아간다. 정체성이란 개체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으로서, 독자적이고 연속적인 속성을 담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통해 저절로 주어지는 소속감과 신분이 정체성의 거의 전부였지만, 근대로 접어들어 ‘개인’이 등장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사춘기의 혼란과 방황은 바로 그 물음에서 비롯되는데, 이후 생애 경로에서도 종종 그 실존적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개인주의 시대라 해도 집단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 지역, 출신 학교, 종교, 또래 집단, 동호회, 팬클럽, 정

치인 및 정당 지지, 성적 취향, 소비적 기호 등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공동체적 정체성이 형성된다. 다만 전통 사회와 다른 것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고 소속 범주를 바꾸면서 자기 나름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인데, 요즘엔 ‘부캐’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의 이미지를 다변화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메타버스가 확장되면서 사회생활이 오로지 ‘아바타’로만 가능한 공간이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이제 다중정체성^{multiple identity}은 표준이 되어가는 듯하다.

정체성은 멋진 자아를 연출하는 프로젝트로 보인다. 그러나 매력적인 개성을 꾸리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의논하고 행동하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삶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순탄한 작업이 아니다. 잦아지는 지구적 재난이나 경제적 양극화 등 절박한 과제 앞에서 많은 사람이 무기력하고 폐쇄적인 일상으로 숨어드는 한편, IS나 국내외의 극우 세력처럼 파시즘적인 집단 숭배에 열광하는 무리가 곳곳에 창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립과 단절이 깊어지는 사회, 혐오와 적대 감정이 만연하는 세계에서 공론장이 들어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그런 가운데 비좁은 틈들을 찾아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움직임이 이어져왔다. 그 흐름 가운데 한 갈래로 19세기에 유럽에서 싹을 틔워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꽃피워온 협동조합이 있다. 그동안 사회경제적인 환경은 엄청나게 바뀌어왔고, 최근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위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균열이 커지고 좌절감이 깊어지는 시대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2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대회

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다루는 데는 존재 이유와 실행 전략에 대한 절박한 질문이 깔려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의 특집에서도 그 맥락과 주요 논점들을 짚어보려 한다.

대회의 주제가 ‘협동조합의 정체성, 그 깊이를 더하다’^{Deepening Our Cooperative Identity}’로 잡혀 있다. 정체성을 심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협동조합의 정신은 처음부터 확고하고 명료했지만, 세계의 협동조합 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좌표와 초점을 점검하면서 원리와 준칙을 토론하고 수정해왔다. 특히 1995년 ICA 100주년 총회에서 발표된 정체성에 관한 선언은 중대한 협동조합이 보편적인 지평을 획득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이번 대회는 그 연장선에서 뿌리를 재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깊이’를 더하면, ‘넓이’도 늘어난다. 근본을 다지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다섯 편의 원고와 한 개의 좌담을 통해 2021 ICA 대회의 주제를 예습하고 있다. 우선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새삼스럽게 질문되는 맥락을 살펴보는 데, 외적으로는 점점 고도화되는 자본주의와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가 부각된다. 기후위기가 중대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압박에 따라 기업들이 ESG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방침을 선언하는 것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협동조합의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다. 조합원들의 고령화, 단지 고객으로서 조합을 이용할 뿐 참여에는 무관심해지는 분위기, 조직의 확대에 수반되는 관료주의….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협동조합의 본연은 무엇인가. 필자와 토론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결사체로서의 규범성’과 ‘기업으로서의 사업성’의 균형이다. 그 균형을 제도화하면서 민주적 통제, 공동 소유, 자발성의 원칙을 관철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협동조합들(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리고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국가 의존적인지에 대해서 최혁진의 글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이 사업적인 자생력을 확보하면서 운동적인 생명력을 키워가는 작업이 절실하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SDGs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협동조합다운 활동과 사업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행 전략이 무엇이고 협동조합들 사이에 어떤 연대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필자들이 제안하고 있다.

이 모든 논의와 탐색의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인문학적 주제로 연결된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견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역사책에 가득한 살육의 장면들,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온갖 추악한 스캔들과 끔찍한 범행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이러한 통념을 반박하는 책이 최근에 출간되었다. 네덜란드의 저널리스트이자 사상가인 뤼트허르 브레흐만^{Rutger Bregman}이 쓴 《휴먼카인드 Humankind : A Hopeful History》인데, 저자는 세상을 지탱해준 것은 인간의 선한 본성이라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한다.

그 가운데 한 가지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유럽에서는 공동체 정신이 폭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목초지가 늘어났고 수질 관리 위원회, 길드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 18세기까지 잘 작동했다. 그러다가 계몽주의 시대의 경제학자들이 집단 농지가 생산성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정부에게 ‘인클로저’를 만들어 공동 재산을 여러 구획으로 쪼개 부유한 지주들이 나눠갖도록 했다. 18세기의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국가의 강제력으로 ‘자유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계획, 강요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수많은 노조와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해 20세기 사회안전망

의 기반이 되었다. 저자는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클로저와 시장 세력의 기간 이후 조용한 혁명이 바닥에서부터 끓어 오르며 최근 몇 년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돌봄 협동조합, 병가풀(개인이 쓰지 않은 병가를 단체로 적립해 필요시에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풀로 운영하는 제도-옴진이)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기획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티네 드 무어는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협동적인 존재, ‘호모 코오퍼런스Homo Cooperance’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특히 시장 개발과 민영화가 급속히 진행된 시기 이후에 장기적인 협력에 초점을 맞춘 제도를 오랜 시일에 걸쳐 구축해왔다”라고 지적했다.

호모 사피엔스의 생존 비결은 무엇인가. 최근 고고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현생인류보다 인구도 많았고 몸이 훨씬 건장했으며 두뇌도 더 컸다. 그런데도 도태되고 멸종된 까닭은 그들의 정신 에너지가 상당 부분 육체를 움직이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인간은 서로에게 배우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쪽으로 지성을 발전시키면서 진화했다. 협동하는 능력이 호모 사피엔스의 생존 무기였던 셈이다. 우리의 유전자에는 ‘호모 코오퍼런스’의 코드가 깊게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 관점으로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면 인간의 본성을 한결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인용한 시를 다시 읽어본다. “생명은/ 자기 자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발견은 우리의 운명을 되짚어보는데 소중한 통찰을 준다.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안에 결핍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존재로부터 채워 받는다.”

‘연결’이 세계의 본질인데, 문명이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그 진리를 망각하고 폐기해왔다. 다른 어느 동물보다도 사회적 의존도가 높은 인간이 경쟁의 논리로 치닫고 각자도생을 부추긴 것은 아이러니다. 그 결과 자기모순과 상호 고립이 깊어졌다. 그리고 사회는 삭막해졌고, 자연은 파괴해졌다.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고 범지구적인 재난이 점점 빈발하는 지금, 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가. 그 정체성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협동조합의 정신은 경직된 이데올로기나 고정된 도그마가 아니라 공생과 연대의 원대한 지향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성찰되고 확인되는 비전, 상황을 비추어 점검되고 재구성되는 원리다. 과시적 소비주의의 범람과 맹목적 집단주의의 발흥에서 드러나는 편협한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서 드넓은 공공세계를 열어가는 시민사회의 움직임 속에 협동조합은 자리하고 있다. 이번 ICA 대회를 통해 그 정체성에 대한 담론이 풍성하게 일궈져서, 앞으로 협동조합의 성장에 비옥한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특
집



WORLD COOPERATIVE CONGRESS

Deepening our
Cooperative
Identity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 세계 협동조합들은 각자 다양한 협동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번 ICA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이 연대와 회복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돌아보고자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생협평론》에서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주제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관지어 내용을 구성했다. 이번 대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다루려 하는 배경과 상황을 담고,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며, ‘ICA 세계협동조합대회 미리보기’의 개념으로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GRESS



협동조합의 정체성

좌담

때 : 2021년 7월 28일 오후 3시
곳 : 아이쿱신길센터 배우락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말하다

참석 —

김 선 화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아이쿱펠로우 연구교수

김 이 경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 박사 수료

신 재 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사업기획파트장

이 가 람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 —

이 상 윤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주임교수, 한국협동조합학회 국제위원장

이상윤 안녕하세요. 우선은 자기소개를 겸해서 각자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민 저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사업기획파트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기획파트에서는 정책 연구 사업, 지역 협력 사업,

시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홍보 사업 등 정말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처음 일한 건 전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전신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연대회의에서 일하던 시기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3법이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대부분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국제협력위원 자격으로 브뤼셀에 소재한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에 파견근무를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주최하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한국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지금 좌담회를 하는 이 장소에서 ICA 세계협동조합대회 한국 개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뜻을 같이하는 여러 명이 모여 해외정보분석연구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협동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결국 1년여 만에 폐업하고 다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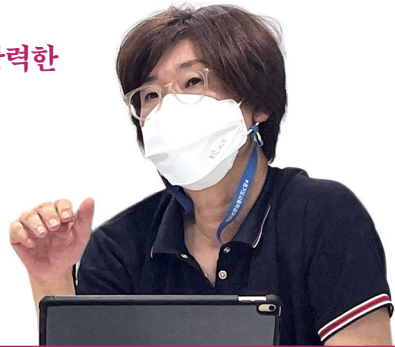
이상윤 혹시 《프랑스처럼 협동조합 하라》라는 책을 번역하시지 않았나요?

신재민 네, 맞습니다. 2016년에 프랑스 연수를 다녀오면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지속성을 증명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의 운영 원리와 조직 방식, 성공 사례 등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상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발간한 실용서를 번역했습니다. 국내 몇몇 기관과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실험하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초기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및 요인, 즉 해당 분야 시장 성숙도나 협동조합 조직화 수준 등의 상황과 변수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어 아직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로 꼽을 만한 협동조합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남동부 작은 산간 마을에 있는 ‘아르들렌 노동자협동조합’을 다룬 책(《별난 기업으로 지역을 살린 아르들렌 사람들》)을 공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들렌 노동자협동조합이 40여 년의 역사 동안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동시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었는지를 협동조합 설립자인 저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들을 수 있어 협동조합인들에게 많은 고민거리와 시사점을 주는 책입니다.

김이경 저는 20세기와 21세기를 넘나들며 협동조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과 일본의 초기 협동조합운동 비교사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대 연구로는 생협의 사회적 가치 측정, 조합원 노동(활동가) 등을 다루고 있어요. 학위논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는 생협 연구소에서 지역 생협 활동가 교육과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생명운동의 중요 문건을 정리해서 역사^{略史}를 쓰기도 하고 조합원 의식조사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3섹터연구소 등에서 시민사회운동, 공동체운동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작업을 하면서 이 땅에서 진행된 협동운동에 관한 역사를 파악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을 하고, 협동조합 역사를 두루 살

“협동조합과 자본 기업의 결정적 차이는 소유권,
즉 협동조합이 조합원 ‘공동소유’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그 주인인 조합원의
‘결사체’이기도 하고, ‘사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잘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협동조합은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공동소유, 즉 ‘인적 결합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조합원의 결속력이야말로 무수한 단점과
불리한 조건을 이겨낼 협동조합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신재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사업기획파트장

퍼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왜 협동조합 역사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협동조합이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개량적 방법론이라는 비판과 함께, 현재 생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인지 중산층을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료를 살펴보면 20세기 초 식민 지배 하에서 지식인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학생, 여성 등 많은 이들이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헤쳐나가기 위해 협

“지금은 협동조합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하고, 고립되고 소외되는 사람을 살피는
작은 협동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협동의 협동, 작은 협동의 성공 경험이
현재 한국 협동조합에는 더욱 필요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지역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연대해서
정책적으로 함께 대응해갔으면 합니다.”



김이경,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 박사 수료

동조합을 설립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치와 민주적 운영이 강조되었
고요. 이러한 역사적 축적을 밝히는 작업 자체가 협동조합의 토대
를 튼튼히 하는 것이 아닐까 자문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오늘의 주제가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지(nature),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인지(nurture)에 대한 논쟁이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가람 저는 자신을 사회적경제 연구자라고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이자 중요한 축이고 두 영역이 서로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협동조합 연구자와 사회적경제 연구자를 구분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에 ‘한국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의 의미’라는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학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연구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번역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콤포니타스 이코노미》라는 번역서에 참여했는데, 이 책은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의 저자인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의 책입니다. ‘EoC^{Economy of Communion}’라는, 이탈리아 시민경제 전통에서부터 최근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금과는 다른 인간 중심적인 경제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 활동 차원에서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운동의 철학과 연결 지어 시장과 관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지금 김이경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회적 가치’입니다. 사회적경제라고 했을 때 사회적 가치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협동조합과의 직접적인 접점이라면 한살림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소극적인 조합원이기도 하고, 번역협동조합 조합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자발적 결성의 동기가 반드시
이타적이거나 공동체 지향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경제 측면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면도 있을 텐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원칙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원칙화하는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는
협동조합들은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종^{species}으로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학습이나 사회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다져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 축이 더해졌을 때
역사적인 평가도 받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가람,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장에서의 제 위치는 사회적경제 활동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그것
을 기록하고, 그 사회적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통
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윤 혹시 연구하셨던 ‘한국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가람 일단 링컨의 유명한 말을 빌리자면 사회적경제는 결국 ‘사회적, 사회를 위한, 사회에 의한 경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사회적경제의 활동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왔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화 저는 2015년에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에 입학했고, 그전까지는 일반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대안적인 경제 영역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협동조합경영학과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공정무역 분야인데, 공정무역과 생협이 밀접하다 보니 그 둘을 연결 지은 연구도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공정무역을 하는 단체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해왔습니다. 그 외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코칭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사람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기업에 입사했는데, 그 공기업이 나중에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압박을 비롯한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늦게 유학을 하게 되었고, 당시 연구한 주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였습니다. IPO라는 건 기업

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시장에서 자본을 더 많이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공개’인데, 제 연구 결과로는 신생 외국계 기업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재적인 기업이 더 유리했습니다. 독재적인 기업이란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면서 강력하게 회사를 통제하는 건데, 협동조합과는 결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다가 2016년에 협동조합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왜 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은 직원들이 하는데, 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지, 경영자를 직원이 선발하는 구조는 불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성공회대학교에 오면서 협동조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6년간을 연구해 오면서 주류 영역의 모든 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협동조합의 여러 원리와 지배구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신탁을 이용하고, 물품은 생협 매장에서 구매하고, 번역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제 정체성도 조금 변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2월에 ICA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체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회의 정체성도 있지만, 개인의 정체성은 각 개인이 어떤 조직, 사회, 단체에 속하는지에 따라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쪽으로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이론들도 있지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정체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우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청년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런
우울함의 원인에는 개인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문제도 있고,
경제적 불안정이나 빈부격차의 심화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격차를 완화하는 데 협동조합이 기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화,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아이쿱펠로우 연구교수



신재민 이번 대회 주제가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입니다. 이 주제를 협동조합 정체성을 점검하기, 강화하기, 헌신하기, 실천하기라는 4개의 하위 주제로 나누어 세션이 진행됩니다. 이상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협동조합 종사자들 사이에 정체성에 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나라마다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정체성에 포함되는 내용 일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협동조

합 정체성에 대해 공통의 틀, 다시 말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 공통으로 가져가야 할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895년에 열린 제1차 대회 때 ICA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때 세 가지 설립 목표를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국가 간에 협동조합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 둘째는 협동조합 원칙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국가 간 통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세 번째 목표인 통상 관계 수립은 당시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협동조합의 원칙을 정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00여 년 간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원칙은 더 중요해지고, 어떤 원칙은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ICA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제31차 대회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가치를 담은 ‘정체성 선언’이 채택되는데, 정체성 선언을 하게 된 당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등장했고 20세기에 전 세계로 확산된 소비자협동조합을 비롯해 노동자, 농업, 주택, 보건의료 등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협동조합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묶어주는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협동조합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경제 불황, 실업 증가, 금융위기, 기술혁명, 경쟁 격화, 복지국가의 후퇴 등 많은 내·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새롭게 등장하고, 협동조합운동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형태와 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결핍이 필요를 낳고, 필요가 결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협동조

합 영역은 쇠퇴하고 어떤 협동조합 영역은 더욱 성장하고, 플랫폼 협동조합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이 현재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에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협동조합들이 최근의 사회·경제적 흐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활동 기준으로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윤 제가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 ‘다른 사람과 구별 짓는 어떤 특성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다른 조직이나 기업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성에 주목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이경 협동조합이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정체성 논의에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이들이 ‘굳이’ 협동조합을 만든



이상윤,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주임교수 /
한국협동조합학회 국제위원장

건 국가도, 사회도,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아무도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원칙과 규율 등을 만들어나갔고, 많은 시도 가운데 성공을 거둔 로치데일공정선거자조합의 원칙이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 정체성의 토대에 로치데일 원칙이 있고, 사회변화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살을 붙이거나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변화 가운데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이 거듭 강조되는 것으로 볼 때, 협동조합은 고유한 정체성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주체가 정체성을 흔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협동조합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가 생산력 향상과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을 일반 기업처럼 운영하는 실무 주체와 이를 내버려 두는 조합원도 정체성을 흔드는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차원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 및 파업 완화, 사회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도입했고, 식민지 혹은 자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제 협동조합을 설치하기도 했죠. 이때 협동조합의 주체는 국가로 기울어지면서 이사 선출과 자본 사용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에 의한 통제가 약화하는 거죠. 이 과정을 비판하며 협동조합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협동조합이라는 조직명을 갖는다고 해서 협동조합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성원은 기존에 논의된 협동조합 원칙을 살펴보고, 자기 조직에 필요한 협동조합의 성격을 제안하고 변화시키는 역할도 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 생존과 협동조합 가치의 충돌이 협동조

합 정체성 강화라는 주제를 호출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협동조합도 지속 가능하기에 일부 협동조합은 조합원 통제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 분화보다 합병이라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은 주체가 아닌 고객이 되고,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형식화되어 협동조합이 더 주식회사처럼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조합원의 고객화’, ‘협동조합의 주식회사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협동조합은 내부의 다양한 주체가 작은 협동을 경험하고, 그 성공이 축적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협동 자체가 쉽지 않고 요즘과 같이 대면이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대기업이 유통, 금융, 먹거리 등을 장악하고 있고 저성장,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도 만만치 않죠. 사업을 하기에는 주식회사가 가장 편리하지만,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협동조합을 해야 하는지, 어떤 협동을 해야 하는지를 재점검하기 위해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ICA 대회에서 그동안 협동조합 정체성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젠더 이슈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과 같은 주제가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고유한 정체성을 점검하고 더욱 강화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이상윤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의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자발성이야말로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가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가람 저는 이번 ICA 대회에서 왜 정체성이라는 이슈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조금은 단순하게 접근해봤습니다. 흔히 '출제자의 의도는 문제 안에 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ICA에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제로 제시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고민의 맥락에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하는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맥락 안에서 다시금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의제로 삼은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협동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이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공동체 정서가 강했던 사회에서는 공동체와 협동에 대해 굳이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상황 속에서 왜 굳이 경제적인 수단으로써 협동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의 변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협동조합 역사를 공부할 때 '로치데일'을 비롯해서 유럽 사례 중심으로 다소 좁은 지역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을 상상했다면, 이제는 예전보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수준이나 실제 활동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유럽 어느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천이 나타나고 있고, 각기 다른 사회, 문화, 경제적인 맥락 안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공통의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체성에 대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시금 고민해야 할 현재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조직의 정체성이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같이 질문하고 같이 답을 찾는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온 것이 바로 ICA라는 조직이 굉장히 오랜 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번 ICA 대회에서 다루게 될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는 세계화 시대의 변화와 협동조합을 둘러싼 신자유주의라든지, 국가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시민의 인식 변화라든지 하는 오늘날의 시대상을 담은 주제들과 연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ICA 정체성 선언문’이나 《레이들로 보고서》에서 상상했던 21세기 협동조합의 모습과 지금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생각했을 때, 제시해주신 것처럼 젠더와 다양성 이슈라든지, 달라진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라든지,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협동조합 정체성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윤 사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협동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지만, 과편화된 소비자로서 존재하게 되면 자본으로 단결된 집단들의 지배력은 훨씬 더 강화되고, 각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자협동조합을 이루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협동’이라는 키워드에도 주목하게 됩니다.

김선화 협동조합의 핵심은 소유 구조, 즉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그리고 다중이해관계자 등 누가 소유하는가와 구성원들의 운영과 통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 결사체이면서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는지가 협동조합과 일반 영리기업을 구분하는 요소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단순할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의 자

본주의 시장경제의 흐름이 크게 변화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고, 시장경제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면 그 시장경제 변화에 따라서 협동조합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프리랜서 협동조합과 같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들이나 돌봄, 의료와 같이 현재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더라도 협동조합은 사회나 조합원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동조합의 사업체적인 특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 생존하려면 수익이 발생하거나 증가해야 하는데, 사회적 목적이나 가치에만 집중하다 보면 협동조합도 경제활동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협동조합이 규모화되면서 고객화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은 작기 때문에 협동조합답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듭니다. 실제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정말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났지만, 그중에 대략 절반가량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없거나,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거나, 협동조합의 결사체로서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협동조합은 마치 1인 기업처럼 운영되기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협동조합이 결사체로서의 특성과 사업체로서의 특성들을 잘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경 저도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화된 협동조합이 사회에 미치는

역할은 상당합니다. 다만 생존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도치 않게 협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규모화와 조직의 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각 조직과 조합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협동조합 모델을 갖춰갈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이 간과되는 건 아닐까 합니다. 덧붙여 한국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담론은 규범성이 강하고 사업적인 모델에 대한 중요성은 조금 덜 강조되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김선화 네, 사실 시장경제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규모화되지 않으면 비용이나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도 소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물류비 등이 포함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소규모 운영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연합 조직을 구성해서 공동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결사체적인 민주주의 특성을 잘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경쟁 상황을 잘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윤 주식회사가 탄생한 배경을 보면, 1860년경에 영국에서 주식회사 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자본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투자자들이 연합해서 철도와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규모화가 필요한 영역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규모가 커지면 감시의 눈도 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여섯 명가량이 모여서 그중 누군가가 절대적

인 영향을 행사하는 작은 조직보다는 수천 명이 모인 큰 조직이 감시의 눈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당한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소유권 측면에서 자꾸 협동조합이 호출되는 이유를 저는 부의 재분배 이슈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계속 양극화되면서 자산을 가진 자, 즉 주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간극이 계속 커지고, 그것은 상속의 문제와도 직결되거든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속을 할 수 있고, 그 지배권들을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아무리 개인의 기여가 크더라도 그 소유권이 상속되는 일은 없죠. 원칙에도 맞지 않고, 물리적인 소유권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UN이나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협동조합이 계속 호출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분배 체계가 주식회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용, 출자, 생산 참여, 노동 참여를 많이 하면 한 만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유권의 측면도 협동조합을 본질적으로 구분 짓는 정체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재민 여러 선택지 가운데 협동조합을 선택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켜나가야 하는 것에서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은 끊임없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러한 변화의 밑바닥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경제적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경제 조직이야말로 공동의 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로치데일이나 몬드라곤이 우리에게 입증해줬습니다. 이상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과 자본 기업의 결정적 차이는 소유권, 즉 협동조합이 조합원 ‘공동소유’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그 주인인 조합원의 ‘결사체’이기도 하고, 조합원의 ‘사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잘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협동조합은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공동소유, 즉 ‘인적 결합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조합원의 결속력이야말로 무수한 단점과 불리한 조건을 이겨낼 협동조합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합원을 결속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면서 1인 기업 또는 동업 기업처럼 일반 기업과 다를 바 없는 기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윤 제가 아는 분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경제적 요구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뜻이 맞는 이들이 모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인데, 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조차도 최소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혼자만 잘살겠다고 하면 그 조직은 잘 굴러가지 못할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서도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협동조합들이 기초 단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독재보다는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진흥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우리 사회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런 측면에서 저는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체계도 중요한 정체성의 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그때 상황이나 다양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생겨나면서 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라 협동조합의 정체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이경 시대적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기업체와 달리 협동조합은 100년 이상 세계 협동조합인들이 함께 모여 정체성, 정의, 원칙 등을 토론하고 수정한 역사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정립된 원칙과 역사성은 존중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 가진 특징이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협동조합의 매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극화입니다. 기업체의 이윤이 누구에게 가는가를 물었을 때,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의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상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자발성, 소유 구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같은 요소를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볼 때, 그런 요소들도 변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상호호혜적인 어떤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소비자로서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 또는 자발적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소유 구조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의 증권처럼 상속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측면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누군가가 독재적이고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변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선화 ICA에서 협동조합의 정의나 원칙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역사를 통해 보면 앞서 신재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발전 양상이나 변화 과정을 통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 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액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의 차등을 주는 미국의 신세대 협동조합처럼 달라진 사례들이 실제로 등장하고 있고, 그 방식도 다양화되는 추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운 그렇다면 덧붙여서 자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사회 서비스의 전달과 같은 도구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장려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정부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 자체를 기회로 보고 협동조합이 결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발성이라는 정체성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국가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사회 공헌 자금을 통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나 사회적경제 기업인들 또는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의 평가 기준에서 사회적 가치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과의 협력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기회를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듭니다.

김이경 한국 협동조합의 강점이자 약점은 제도적인 기반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마련되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원금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아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과 암이 있을 텐데요, 정부 지원금과 협동조합의 확산 그리고 자립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문제는 협동조합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협동조합 담론이나 제도,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을 보고 있는가, 즉 권력의 축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민 협동조합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발적인 결사체잖아요. 저는 그러한 협동조합 결사의 자발성과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산 정권 치하에 있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옛 소련,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서도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공산 정권이나 사회주의 정권 아래에서 마치 국영기업처럼 정부 주도로 설립되고 존재했던 그러한 협동조합들을 ICA에서 회원조합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 논쟁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자율과 독립이라는 원칙과의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시즘 정권 치하의 이탈리아나 독일에서 기존의 협동조합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다소 변질되었던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것들을 협동조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협동조합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이 견지했던 것을 보더라도, 여러 원칙 중에 어떤 원칙은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 원칙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독립적으로 자본을 형성하지 못하고 정부에 의해 만
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을 진정한 협동조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에 대해 어떤 단일한 기준이나
잣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
에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고 반영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우리나라 농협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
에 농협이 진정한 협동조합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고, 신
협의 변화 과정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서민들의 필요로 만들어졌지
만,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를 보는 시각에 대
해서 연구자마다 관점도 해석도 다르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진 민주적인 정권이라고 해도 그 어떤 관여도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고, 정부의 관여 자체를 비판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고, 역대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책들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동조합이 처음에 잘 만
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
인데, 신협의 사례를 보면 신협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 시
스템이 발전하면서 신협의 역할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런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으로서 신협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와의 관계나 시
장과의 관계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가람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 독립성의 연결선상에서

보면 ‘결사의 자발성’이 있고, 결사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의 독립성’이라는 변수도 있는데,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존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시각이 반영되면서 그 단어의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콤폴리타스 이코노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인데,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말할 때,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처음 자리 잡던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독립이라는 개념과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이라는 개념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동조합 초기에 ‘공동체 속에서의 삶’이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던 당시 사회에서는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최근 자조나 자기 돌봄 같은 영역에서도 독립적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완벽하게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관계 속에서도 내가 충분히 독립적인 인간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면 진공 상태에 가까운, 관계가 없는 상태만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독립성이라는 게 어떤 협동조합이 진정한 협동조합인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특정 정권이나 어떤 정치적/경제적인 압력에 따라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스스로 설 수 있을 정도를 말하는 것, 즉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이라는 게 반드시 외부와의 관계를 모두 끊는 무관계성과 동일시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정부와의 관계나 시장에서의 생존 문제를 말할 때, 금전 문제와 같이 간접적인 요소들로 인해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이 대단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앞서 정체성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길러지는 것이냐 하는 논쟁을 말씀하셨는데, 사회 정체성 측면에서 협동에 관해 이야

기할 때,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협동한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자연적인 속성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 학습이라는 지점이 흔히 간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협동이나 공동체나 사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동이 만들어질 기회 자체가 부족한데, 협동조합-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제시하는 이런 원칙에 가까운 정체성의 아이디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협동에 대한 학습과 사회화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된다고 하는데, 그 자발적 결성의 동기가 반드시 이타적이거나 공동체 지향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경제 측면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면도 있을 텐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원칙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원칙화하는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는 협동조합들은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정체성에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갈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요. 이런 이유로 하나의 종(species)으로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학습이나 사회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다져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 축이 더해졌을 때 역사적인 평가도 받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윤 그 말씀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체성이 없는, 또는 미약한 협동조합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가람 정체성이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협동조합

을 설립했을 때,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스스로 정체성이라고 함께 믿었던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도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많은 협동조합이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해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와해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협동조합에서 협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걸 함께 도모해보자는 결의가 처음에 있었을 텐데, 그러한 협동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지 못했을 때 그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나 와해가 생기는 일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윤 네, 좋습니다. 비단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생 기업들도 운영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5년 이내 폐업률이 아마도 협동조합보다 낮지는 않을 겁니다. 협동조합이 유독 운영이 어렵거나 생존율이 낮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민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대안적 모델이다’,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시장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등등 각각의 협동조합 설립 목적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협동조합이 달성해야 할 목표치처럼 말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무겁게 협동조합을 이야기하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요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 조직들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전쟁, 경제불황, 정치적 억압, 기술혁명, 경쟁의 격화, 소비자 기호 변화, 사회적 재난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외적 요인, 변수, 환경들이 아닌,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의 성장 과정을 보면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점포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지점 확대 전략을 취한 것처럼 우연한 전략도 있고, 도매업과 제조업을 통합한 협동조합모델을 전략적으로 채택한 것처럼 신중하게 계획된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법은 없으므로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규모화와 민주주의, 효율성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을지와 같이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존스톤 버첼^{Johnston Birchall}의 《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이라는 책에 “몬드라곤이 성공한 것은 ‘균형’을 제도화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기본적인 가치가 때때로 ‘이율배반적’일 때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없고,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며, 노동자에 의한 민주적 관리와 강력한 경영진, 중앙은행(노동인민금고)에 의한 관리와 각 협동조합의 자립, 대규모 자본투입의 필요성과 노동자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출자금 반환의 필요성처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 상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윤 제가 올해 또는 작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완전히 자본주의로 재편됐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바로 20~30대의 주식 열풍입니다. 즉 주식을 소유하는 자산 투자자로서의 관점들이 이렇게 크게 드러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부동산 가격 폭등 같은 요인들과 맞물려서, 자산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인식이 20대부터 너무 강해지고, 그 결과 주식투자의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런 20~30대 젊은 층에게 협

동조합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가 고민인데, 사실 주변의 대학생들도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간절하게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 자본주의가 완전히 고도화되는 상황,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투자자가 되고, 자본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주식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부동산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간극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협동조합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런 젊은이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선화 저는 흔히들 ‘MZ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협동조합이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런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 세대들에게 협동조합이 의미 있게 다가가려면 경제 민주주의나 부의 재분배와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주식에 열광하는 배경에는 개인의 또 다른 노력으로 자신의 소득을 증대해보려는 욕구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시장경제를 이해하게 되고, 투자하고 소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조금씩 학습하

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가 협동조합과 점점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협동조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쉽고 안정적인 대출 구조라던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같은 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면 예전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의 방식을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이런 현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윤 젊은 세대들로부터 기업을 보는 관점에 많은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의 투자금액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아마 기업에 대한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헨리 한스만^{Henry Hansmann}이 《기업 소유권의 진화》에서 주장한 것처럼 주식회사가 투자자의 협동조합이라고 봤을 때, 젊은 층들이 힘을 모아서 오너 일가들의 불명확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과 견제를 할 가능성도 커질 거고요. 주식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주식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자산 가치도 높아진다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자산 가치를 높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동조합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비용들을 낮출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됩니다. 주식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

이는 것과 협동조합을 통해 주거 비용 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상반된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이정 2020년 초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빅테크 기업은 더욱 성장하고 폭락장은 상승장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 주식시장이 활발한 건 금융플랫폼의 편리성과 2014년 이후 단주 거래가 가능해진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 이자가 이전처럼 높지 않고 부동산이라는 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노동으로 벌어들인 자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서 투자를 받는 기업의 발표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장기업이 분기별로 실적과 계획을 발표하는 게 투자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주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규모가 큰 한국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인은 차치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1년에 한두 번, 총회 같은 자리에서 두꺼운 자료집이나 간략한 연차보고서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요즘 주식시장에는 소위 MZ세대가 꽤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 MZ세대 중 일부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의 거버넌스뿐 아니라 사업이 환경과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두루

살펴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ESG가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협동조합도 충분히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 가진 사업적 의미, 의사결정 구조의 가치와 같은 매력을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매력적으로 다가간 후에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언급한다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윤 저는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는 협동조합이 균형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생협 진영에서 강조하는 친환경 유기농업이나 플라스틱 절감 운동 같은 것들에 대해 이마트 같은 대기업 진영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소비자의 변화 트렌드 같은 측면에서 더 큰 집단이 좀 더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협동조합의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협동조합을 잘 알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더 큰 기업들을 압박해서, 그들이 협동조합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는데, 지금은 단순히 주식 투자자로서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민 공무원 시험이나 주식투자 등에 몰리는 청년 세대에게 대안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고, 그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제협동조합 사회에서도 청년협동조합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퀘벡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 서밋에서 청년의 협동조합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청년

을 위한 ‘영 리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부문 조직 중 하나로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자소유기업, 생산자 및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CICOPA는 청년의 협동조합 창업 촉진을 위한 ‘We own it’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청년협동조합 창업 사례나 기업을 인수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사례 등 다수의 성공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청년협동조합은 주로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고 교육, 정보 통신 기술, 프로그래밍,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연구, 마케팅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면서 스스로 일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HBM 협동조합연구소의 경우, 청년을 대상으로 MTA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일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적 삶의 추구하고 경제적 동기가 맞물려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청년 세대가 협동조합을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라는 실험실 안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할 기회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정책사업이 더 많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윤 저도 이제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기업의 승계권 시장에 대한 정책적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재 소유주 중소기업은 상장 안 된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자손들도 승계하겠다는 비율이 조사 결과로는 20퍼센트 미만이라고 합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그런 기업 승계권 시장에서 신재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그런 기업을 인수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도 미리 준비된다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가람 저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분명히 사회적경제 영역에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더라도 돈만큼이나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식도 적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왜 협동조합에 관한 관심으로 연결되지 않는지 고민해보면 아무래도 협동조합이 청년들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동조합을 하려면 원칙이나 가치를 배워서 알아야 한다고 하고, 교육도 많은 느낌이니 사회적경제 영역 중에서도 일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함께 해결한다는 작은 경험부터 쌓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경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틀로서 협동조합을 고민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협동조합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은 협동 자체가 낯선 청년들에게 일상과의 괴리가 생기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가볍게 접근하고 생활 속에서의 점점부터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의 주식이나 코인 열풍을 보면서 경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열풍을 우리는 현상으로 바라보지만, 그 이면에는 중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나 주식, 신용카드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배운 경험이 자리 잡

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의 방식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는 거의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희망적인 경험을 하나 했었는데, 어떤 청년분이 협동조합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릴 때 생협 활동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할 때 선진국보다 역사가 짧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미 한 세대에서도 다음 세대로 이어졌을 만큼의 경험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경험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할 때 알게 모르게 뭔가 부족하고 힘들다는 식으로 실패와 부정의 언어들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부모의 생협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지금의 그 청년을 협동조합 연구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삶 속에서의 접점이 협동조합이 청년에게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윤 그런 면이 생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죠. 자녀나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생협 내에서 얼마만큼 고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젊은 세대가 육성되면 적어도 100만의 생협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이경 다만 현재 생협의 전개 방향이 과연 젊은 세대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쿱생협과 한살림의 조합원 의식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조합원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젊은 세대의 유입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생협이 성장을 함께한 조합원들을 끌어안기 위해 노인 세대를 위한 사업에 더 주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물론 주요 소비를 담당해 온 소비자의 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인 가구 증대와 같은 다양한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려는 필요성과 의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가람 아무래도 생협의 기존 조합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화 되고 있어서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차원의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화 친환경 시장 자체가 초기와는 달리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그만큼 미래를 위해 투자할 여유가 크지 않아서 기존 조합원에 집중하기도 벅찬 상황이 되고, 상대적으로 청년층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가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관해 이야기할 때, 주로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큰 조직은 큰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만, 사실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체들이 새로운 방식의 협동을 조직하는 것이 더 잘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증가 같은 경우에도, 기존 생협의 역할을 통한 대응을 고민해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필요를 직접 협동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 과

정에서 생협과 만날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흔히 ‘소셜하다’고 여겨지는 섹터 안에서 버려지는 식자재를 이용해서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1인 가구라서 남게 되는 식자재를 활용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협동조합 방식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런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의 원칙과 기존의 협동조합 활동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이경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에서 규모 있는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혹은 협동조합 간 연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역 내 실업자를 생협 매장에 긴급 채용하거나, 잡지 《빅이슈》를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판로를 열어주는 등 지역과 사회적경제가 상호부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나의 문제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까요.

김선화 앞서 김이경 선생님께서 협동조합이 규모화되면서 고객화 되는 경향과 미국의 기업 보고서가 매우 자세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도 참여하는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 협동조합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방법들이 개발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치 주식 투자자들이 기업의 리포트를 통해서 그 기업의 전망과 사업 구조 등을 파악하는 것처럼, 협동조합에서도 그런 것이 가능

하다면 새로운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윤 제가 아는 오래된 주점 브랜드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브랜드이다 보니 주 고객층의 연령대도 높습니다. 실제로 매장에 가보면 고령화된 예전 고객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젊은 층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생협이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보면 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젊은 층의 요구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시중의 다른 업체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마케팅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협동조합도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 시기에 협동조합이 어떤 소임과 비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강화 또는 변경해야 할지, 달라진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민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듯한 시간을 겪으면서 더욱 불거진 사회의 양극화는 도저히 어떻게 봉합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깊은 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심화된 여러 분야에서의 격차와 결핍을 해소하는데 협동조합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과거 경제 불황과 금융위기에 잘 대응했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법을 마련하려는 상상과 시도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위기 대응력이 강하다는 것을 실천

과 사례로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협동조합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공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임팩트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사회 및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활동 및 사업성과를 평가한 ‘사회적가치보고서’를 발간해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일반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 사회책임 활동, 공유가치 창출, ESG 경영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부터 ESG 강화 흐름은 있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환경문제 및 기후위기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글로벌 금융기관의 ESG 중시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SK, 한화 등 국내 대기업과 KB금융 같은 금융그룹들도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방식으로 생산, 기술, 마케팅 등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엑셀러레이팅과 임팩트 투자를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협동조합이 혁신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회가 열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이정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김형미 전 소장님은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인용하며 ‘협동의 반대는 경쟁이 아닌 고립, 혼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고립되는 사람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많아졌고, 이런 상황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단어 안에 표현된 것처럼 협동, 연대, 교류를

강조하는데, 비대면이 지속되면 지금도 느슨해진 조직 내 관계가 더 멀어질 거예요. 메타버스나 온라인에서의 만남 등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여러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교류가 필요해요. 제한된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도,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놓쳤던 조합원 간 유대성을 다시 강조하고 사업을 넘어 조합원이 협동하는 본래의 역할을 해보는 겁니다. 동 단위로 조합원 그룹을 만들어 조합원끼리 안부를 묻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점은 없는지, 도와줄 부분은 없을지 등 서로 돌봄을 소소하게 시도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협동조합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하고, 고립되고 소외되는 사람을 살피는 작은 협동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협동의 협동, 작은 협동의 성공 경험이 현재 한국 협동조합에는 더욱 필요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지역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연대해서 정책적으로 함께 대응해갔으면 합니다.

이가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협동조합이 많은 상황에서 일단은 살아남아야 정체성을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가 지난 뒤에 사회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생각해보면, 가상 세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에도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실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런 상황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에게는 지역의 거버넌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자리매김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역에서의 맥락이 코로나19 위기로 달라지는 가운데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지금 어떤 규모의 협동조합이든지 이 시기를 겪어내면서 무언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 상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휘발하지 않게 기록하고 붙들어놓는 것. 이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버티면서 잘 살아남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경험과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두었다가 앞으로 사업 모델을 구상할 때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의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선화 코로나19 위기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우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청년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런 우울함의 원인에는 개인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문제도 있고, 경제적 불안정이나 빈부격차의 심화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격차를 완화하는 데 협동조합이 기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젊은 세대의 주식 열풍을 보면 소위 ‘묻지 마 투자’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근차근 경제를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주식을 공부하면서 정보 격차들을 해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아가서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지고 ‘누구를 위한 의사결정 체제인지’와 같은 고민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기

업의 대주주와 재벌을 위한 의사결정에 대해 소액주주로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 소수가 독점해서 자본을 증식하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풀어가려는 젊은이들이 생겨나는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통해 협동조합과 연결되는 고리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한 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협동조합 진영에 계시는 연구자나 실무자들이 조금 더 포용적인 시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라볼 때, 그래왔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는 비판적인 관점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협동조합이 그런 방식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식의 포용성을 좀 더 가지는 게 우리의 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라는 게 일종의 변방이고, 우리 스스로도 비하하는 느낌의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일종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교육, 앞서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경제 교육 같은 것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협동조합답게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제입니다. 실제로 자본시장의 규제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음에도 규모가 굉장히 커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럴수록 조합원으로서 좀 더 참여를 요구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는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벌어지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도 더 커지겠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고, 협동조합도 그에 따른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주제로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찬 호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ICA-AP 사무총장

ICA 세계협동조합대회와 협동조합의 정체성

세계협동조합대회로 ICA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협동조합의 두 가지 성격, 즉 운동의 결사체적 성격과 사업체적 성격 사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지금의 협동조합 정체성은 로치데일공정선거자조합으로 대표되는 영국 소비자협동조합의 사업체적 성격, 그리고 결사체적 성격을 중시했던 프랑스 농업협동조합 전통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고민의 역사이다.

1. 지금의 상황

올해 12월 1~3일 서울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World Cooperative Congress (이하 서울대회)가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 Deepening Cooperative Identity’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본래는 작년에 ICA 창립 125주년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에 맞춰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것이다. 대회 방식도 온라인 화상 회의와 오프라인 현장 회의를 섞어서 하는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 사전 행사로 11월 28일부터 30일 기간 중 ICA 연구위원회와 법제위원회 주관으로 ‘국제 협동조합 학술 컨퍼런스’와 ‘국제 협동조합 법제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협동조합학회는 소주제별로 인터넷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¹ 또한 아태지역총회 Regional Assembly, 전체총회 General Assembly도 개최될 것이다. 여기서 결의문들이 채택되고, 이런 문건들은 앞으로 세계 협동조합운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래 대회의 모습은 2012년 UN ‘협동조합의 해’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제32차 대회처럼 협동조합박람회도 열릴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지금 상황으로는 최소한으로 치러질 것 같다.² 그렇다. 지금 우리는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삶의 방식부터 바뀌고 있고 지구촌 전체의 경제, 사회, 환경 위기를 총체적으로 실감하고 있다.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1 이 코로나 위기가 협동조합의 전통적인 면대면 회의 방식이 갖는 장단점을 서로 맞바꿔 보는 기회가 되고 있다.

2 대회 장소가 코엑스에서 그랜드워커힐로 변경되었고, 서울시는 여기에 전시 부스를 설치하는 데 5개 조직을 지원한다는 공시를 한 바 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집에 박혀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인지 세고 있다. 또 미디어에서 하루가 멀다 하게 지구촌에 이례 없던 폭염, 대규모 산불, 대홍수와 같은 기후 재앙 뉴스를 본다.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아 걱정이다. 들판과 강과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인류를 ‘호모 플라스틱쿠스’^{Homo plasticus}라 부르는 것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그리고 이런 위기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에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사업체^{enterprise}라는 협동조합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체성에 깊이를 더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혁신적인 방책과 전략은 있는가? 사람들을 조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할 사업은 있는가? 연말에 가질 서울대회에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이다.

2. ICA가 기대하는 서울대회

아리엘 가르코^{Ariel Guarco} ICA 회장은 2020년 초 신년사³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한국이 이 대회를 개최할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한다며, “한국은 전통과 현대성, 미래 비전이 잘 어우러져 균형을 이루는 나라로 세계에 잘 알려”져 있고, “더 나아가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 공공기관의 강력한 지원정책은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브루노 롤랑츠^{Bruno Roelants} ICA 사무총장은 서울대회의 총괄 실무

3 <ICA 회장이 전한 신년 인사 “2020년은 기념할 만한 해가 될 것”, 《라이프인》 2019. 12. 25.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5586>

자로서 지난해 11월 온라인 영상으로 서울대회에 거는 그의 특별한 기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서, 협동조합 정체성을 통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와 평등 같은 또 다른 글로벌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⁴

아울러 그는 이번 ICA 서울대회는 여러 면에서 특별하다고 했다. 첫째, 이번 대회는 125년 ICA 전체 역사를 통틀어 유럽 밖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대회라는 점, 둘째, 1995년 개최된 대회와 그 이전 협동조합 원칙 개정(1937년과 1966년)의 두 차례 대회처럼 협동조합 정체성과 그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는 중요한 대회라는 점, 셋째, 2019년 10월의 키갈리 ICA 총회에서 새롭게 승인된 ‘ICA 2020-2030 전략 계획’이 핵심 요소인데 이 전략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개최된다는 점, 넷째, 최근 100년의 역사에서 최악으로 기록될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개최되어 인류가 처한 여러 위기에 협동조합적 대응을 논하게 된다는 점도 특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대회에서는 무슨 논의가 있을 것인가? ICA 서울대회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코너를 보면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윤곽이 드러난다. 대회는 4개의 세션으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동시 세션의 주제들이 안내되어 있다.⁵

〈세션 1〉 협동조합 정체성 점검하기

협동조합 정체성은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묶어준

4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성과공유회’ 자료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11. 24.
<https://www.svsfund.org/news/activity/200>

5 World Cooperative Congress 2020. <https://icaworldcoopcongress.coop/>

다.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협동조합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유형의 사업체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어떻게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까?

—동시 세션 소주제 : 1-1) 협동조합 브랜드, 1-2) 포용적인 거버넌스, 1-3) 협동조합 교육 기회, 1-4) 협동조합 문화유산, 1-5) 정부와의 관계

〈세션 2〉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하기

오늘날의 복잡한 글로벌 경제에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사람 중심 협동조합 모델은 재능과 창의성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통해 더 인간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협동조합 정체성을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동조합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

—동시 세션 소주제 : 2-1) 디지털 시대의 장점 선점, 2-2) 윤리적 가치사슬 경영, 2-3)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2-4) 미래 자본의 요구 충족, 2-5) 사업체적 혁신을 지원

〈세션 3〉 협동조합 정체성 헌신하기

포용과 인류애는 협동조합 정체성의 핵심이며, 협동조합을 세계 평화 회복의 소중한 도구로 만들어준다. 협동조합들은 난민들의 요구에 답하고, 자연재해 이후의 삶을 복원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글로벌 전염병에 맞서고 있다. 다양한 성격의 글로벌 위기들이 촘촘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협동조합들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

—동시 세션 소주제 : 3-1)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3-2) 인류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3-3) 글로벌 협동조합 개발을 위해, 3-4) 지역 사회 강화를 위해, 3-5) 강점을 살려 위기에 맞서기 위해

〈세션 4〉협동조합 정체성 알리기

협동조합 정체성은 협동조합들이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로 표현되는 근본적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사회변화에 동참하도록 이끈다. 조합원에 기반한 풀뿌리 조직인 협동조합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UN 글로벌 정책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어떻게 지역에서의 효과적 실천으로 연결되고 있을까?

—동시 세션 소주제 : 4-1) 보람 있는 일자리를 통해, 4-2) 접근 가능한 의료 및 사회서비스를 통해, 4-3) 강화된 식량안전을 통해, 4-4) 혁신적인 협력을 통해, 4-5) 믿을 만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3. ICA 전체총회와 ‘ICA 2020-2030 전략 계획’

이번 ICA 서울대회와 전체총회에서 제출될 가장 중요한 문건은 ‘ICA 2020-2030 전략 계획’이다. 이전의 ‘협동조합 10년 청사진⁶ 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전략 계획의 이름이 ‘사람 중심의 길을 위한 두 번째 10년 전략 계획’⁶으로 투자자소유기업과 대비되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조했다.⁷

두 번째는 ICA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새롭고

6 “A People-Centred Path for a Second Cooperative Decade : 2020-2030 Strategic Plan”, ICA.
<https://www.ica.coop/en/media/library/ica-2020-2030-strategic-plan>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점이다. 예컨대 정체성 강화 부분에서 “ICA 이사회의 협동조합 정체성위원회 산하에 주제별 태스크포스를 두고 협동조합 정체성을 훼손하는 모든 국내 또는 국제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든지, “우리는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에 초점을 맞춘 협동조합 ISO 인증을 탐구할 것”이며 “인증을 위해서는 ICA 시스템과 국가 차원의 협동조합 조직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ICA 회원 인증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ICA는 또한 ‘협동조합 간 협동’의 차원에서 우선 국제 협동조합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협동조합 들끼리 사업적 기술과 정보교환을 위한 IT 기반의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원대한 계획들도 밝히고 있다.

셋째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 세부 전략 중에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분야에 169개 세부 목표 평가지표^{indicator}들에 맞춰 협동조합 평가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있다.⁸ 매우 획기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는 데, 협동조합 원칙 7 ‘지역사회 관여’의 의미를 지구촌으로까지 확장함을 주저치 않고 있다.⁹ 이로써 ICA가 국제 협동조합운동의 정체성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협동조합의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주체도 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배어난다.

7 2017년 10월 쿠알라룸푸르 총회에 제출된 초안에는 ‘세계화에 (대응한) 사람 중심의 길(people-centered path for globalization)’ 전략 계획으로 불렀는데, 2019년 키갈리 총회에서 승인된 최종 본에는 ‘세계화’라는 단어는 빠져 있다.

8 ICA의 목적(ICA 내규 제1조)에 서술된 “4. 지속가능한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 나아가 사람들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한다”를 실행하는 것이다.

9 ICA가 1995년 발간하고 한국협동조합협의회가 번역한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2015)에서 지역사회 의미 설명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4. 대기업의 ESG 열풍과 협동조합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ICA 역사상 1995년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동기를 준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꼽으라면 1980년 제27차 ICA 모스크바 대회에서 보고된 레이들로 A. F. Laidlaw 박사의 연구보고서 《21세기 협동조합*Co-operatives in the year 2000*》일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오늘날 여실히 드러난 다국적기업들의 폐해와 사악함을 서술하면서 “이런 잘 보이지 않는 사악한 힘이 미래에 어느 정도 경계심 많은 정부와 시민들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라고 예견한 바 있다. 40년 전에 가진 그의 통찰력이 대단하다.

현대 대기업의 성장과 확장은 다국적기업이며, 특히 약하거나 종속적인 정부가 기계화와 금융 조작으로 자신의 책략에 연루되기 쉬운 제3 세계에서 특히 사악한 형태의 기업 권력이 되었습니다. 금세기의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힘과 다국적기업의 확산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 경계심이 강한 정부에 의해 보다 긴밀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며, 정보를 잘 알고 경계하는 시민들의 대중적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¹⁰ (A. F. 레이들로, 1980)

그런데 요즈음 레이들로의 예견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ESG 경영’ 열풍이 불고 있는 중이다. 환경^{Environment}, 지속가능성^{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하는 ESG는 CSR^{Corporate Social Re-}

¹⁰ A. F. Laidlaw,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레이들로 보고서)”, Part II. World Trend and Problems(세계 동향과 문제점)의 1. The World We Live In(우리가 사는 세상) 중 (9) Corporate Power(기업의 힘), 1980년 제27차 ICA 모스크바 대회 Agenda and Reports, 125쪽.

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기업들이 시대적 흐름에 영합하려고 만든 프레임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¹¹이 앞다투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이 열풍의 근원지는 미국 다우존스^{Dow Jones} 지수가 선도하는 국제 금융시장이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기업들에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공시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한 비재무적 성과지표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대기업들은 기존의 재무적 성과지표와 더불어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¹²가 권장하는 비재무적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한 착한 기업 이야기를 모으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재무적 ESG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ESG를 뒷받침하는 다른 성과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DJSI, ISO 26000, SASB 등이 있다.

그런데 ESG 개념 지표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지속가능성이란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인지 UN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말하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인지가 모호하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한국증권거래소가 2025년부터 자산 2조 이상 기업에 대해(2030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 상장사)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GRI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 비전은 “모든 조직의

¹¹ 펩시, 아디다스, 네슬레, 월마트, 이케아, 시스코, 폭스바겐, 아스트라제네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다.

¹² GRI는 1997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된 단체. 1989년 미국 유조선의 좌초로 알래스카 해안 환경 오염 발생 사건 이후 미국의 환경단체인 CERES(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를 위한 연합)는 1997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협약을 맺고 GRI를 설립했다. 현재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발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경제 성과, 사회 성과, 환경 성과에 대한 보고의 정형성과 비교 가능성을 재무 보고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³ 이제 윤리적 가치도 돈으로 환산하려 하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투자자 소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전체 문화에 통합할 수 없을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소유회사라면 이 네 가지 윤리적 가치를 구현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은 종종 그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은 본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에 적시된 대로 협동조합의 가치 중 하나이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의 일반적 가치에 기초하고,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이런 가치들은 한 세트로 묶인 하나의 가치 체제여서 하나만 가지고 협동조합의 가치를 논할 수 없다. 또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구성원의 행위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인정받는 모든 사업체는 조직될 때부터 사회적 책임은 기본 책무인 것이다.

ICA는 2015년부터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의 움직임에 그동안 몇 가지 중요한 조사 작업을 해왔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CA는 2016년 3월 ‘협동조합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¹⁴ 이 가이드북은 현황 조사에서 전 세계 300개 협동조합 중 상위 50개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사회, 환경, 지속가능성 영향 지표와 도구의 유형

13 GRI 홈페이지. www.globalreporting.org

14 “Sustainability Reporting for Cooperatives : A Guidebook”, ICA, 2016.

www.ica.coop/en/media/library/sustainability-reporting-cooperatives-guidebook

을 검토했다.¹⁵ 그 결과, 1)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비재무적 지표를 추
적하기 위해 이러한 성격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2) 도구를
사용하는 협동조합들은 GRI, AccountAbility, LEED 및 UN Global
Compact를 포함하여 투자자소유회사를 위해 설계된 도구를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이드북은 제5장에서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12단계를 서술하
고, 제6장에서 소수의 협동조합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지속가능성 프
레이م들을 소개하고 있다. 즉, AA1000 AccountAbility([www.accountabil-
ity.org](http://www.accountability.org)), B-Corp(www.bcorporation.ne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www.cdp.net),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www.sustainability-indices.
com](http://www.sustainability-indices.com)), 지구헌장(www.earthcharter.org), 가치은행을 위한 글로벌연합
(GABV, www.gabv.org),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www.globalreport-
ing.org](http://www.globalreport-
ing.org)), 국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IIRC, www.integratedreporting.org),
ISO 26000(www.iso.org/home.html), 지속가능성 회계표준위원회(SASB,
www.sasb.org)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교했다. 그리고 제7장 협동조합 원
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제8장 지속가능성에 대한 커뮤니케이
션 보고서, 제9장 평가 과정, 제10장 샘플 보고서, 제11장 결론의 순으
로 가이드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결론적으로 조사 대상 연합체 협동조합의 이러한 노력
이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민간 및 투자자소유 기업의 맥
락에서 투자된 것이어서 이로 인해 개별 협동조합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지 옵션은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
해 기존 프레임워크를 조정하고 기업의 협동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가

15 Duguid, F., *Social and Environmental Tools and Indicators for Co-operatives. Presentation at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Research Committee Conference*, Paris, France, 2015.

장자리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옵션은 협동조합의 사업 방식을 반영하는 협동조합을 위한 특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 접근 방식은 협동조합운동 전체의 상당한 노력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ICA는 2018년 12월, ICA의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분야에서 지표 개발 포함 ‘협동조합의 가시성’을 위한 사업을 위해 모금 마련을 시작했다.

우리는 국제협동조합운동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선언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변화의 힘에 대해 확신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¹⁶ (ICA 회장 아리엘 구아르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2014년부터 ‘생협의 사회 가치’ 보고서¹⁷ 발간을 시작했다.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아이쿱생협의 사업과 활동이 조합원의 편익과 고용 창출, 생산자의 소득 보장 등의 경제적 편익을 위한 공헌만이 아니라,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적 자본의 확대 등 ‘공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 생협에서 발행한 책자의 경우에는 아주 가독성이 있게 디자인되었다. 일본생협그룹이 제작한 생활클럽 소책자를 보면 많은 내용이 18쪽으로 압축된 것을 볼 수 있다. 《Think & Act 데이터 북 2019》¹⁸라

16 “COOPERATIVES for 2030 : Cooperative initiatives to achieve a more sustainable future for all”, ICA, 2018.

17 이향숙·이문희, 《생협의 사회 가치 2014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4. http://icoop.re.kr/?mod=document&uid=1641&page_id=2994

는 표제가 붙은 이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들을 열 가지로 크게 나누어 행동적인 언어로 서술했다. ‘생각과 행동’에 필요한 정보와 통계들을 도표화했으며, 해당 사항마다 UN 지속가능목표 중 어떤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아이콘으로 표시해 소비자 조합원, 일반 대중,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해하기 쉽게 했다. 이는 미디어나 정부, 국제기관까지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듯하고, 한글판도 번역되어 소개하고 있다. 열 가지 약속 사항 중 첫 번째 ‘Think & Act’는 “음식의 안전을 고집합니다”이고, 그 세부 사항은 “식품첨가물 : 허용하는 식품첨가물은 86 품목”, “농약의 삭감 : 매년 추진되는 농약의 삭감”, “방사능 대책 : 방사능 검사는 11만 8152건”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엄격한 기준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 협동조합의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세계협동조합대회로 ICA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협동조합의 두 가지 성격, 즉 운동의 결사체적^{association} 성격과 사업체적^{business enterprise} 성격 사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지금의 협동조합 정체성은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으로 대표되는 영국 소비자협동조합의 사업체적 성격, 그리고 결사체적 성격을 중시했던 프랑스 농업협동조합 전통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고민의 역사이다. 그리고 1980년 제27차 대회에서 레이들로가 이 둘의 양립이 협동조합의 본질임을

18 《Think & Act 데이터 북 2019》, 생활클럽, 2020. 3. 생활클럽사업연합, 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생활클럽사업연합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생활클럽공제사업연합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 제작했다.

https://seikatsuclub.coop/excludes/rengou/img/about/vision/2019thinkandact_k.pdf

폐뚫어 보고 이를 협동조합 정의를 내리는 기초로 썼다. 또한 1995년 제31차 대회에서 이안 맥퍼슨^{Ian MacPherson} 교수는 이를 균형 있게 담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을 작성했다.

이안 맥퍼슨은 그래서 “협동조합은 항상 철학적 가치와 현실적 사업 사이 갈팡질팡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팡질팡 고민하는 것은 협동조합 운동은 영원한 약속^{perpetual promise}의 운동이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기^{becoming} 위한 운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¹⁹라고 말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협동조합의 성격^{nature} 가운데 무엇이 먼저냐고 물었을 때, 둘 다 항상 같이 다녀야 한다고 말한다. 협동조합의 새로운 사업거리는 결사체적 운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리적 범위는 작을수록 좋다. 그러나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편익을 효과적으로 창출하려면 규모가 커야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여 잉여를 발생시키는 사업체적 성격이 강조된다. 또 잉여가 커지면 이번엔 ‘지역사회에 기여’라는 결사체적 성격이 강조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되려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선구자들은 늘 닦치는 도전 앞에 혁신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를 헤쳐 나가는 기업가정신도 협동조합의 본질적 운명에 속한다.

그런데 대면 관계를 상호 소통의 기본으로 삼는 협동조합이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면 조합원과 구성 요소 간 커뮤니케이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치이고, 실제로 그렇다. 그러므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큰 조합은 약해진 결사체적 성격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

19 Ian MacPherson, “Cooperative Principles for the 21st Century(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Co-operative Promise(협동조합의 약속)’, 1995년 제31차 ICA 맨체스터 대회 Agenda and Reports, 67쪽.

다. 그래야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을 수 있고 지속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었다.

그렇다면 현 상황, 이 시대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도 커졌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지리적 범위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무의미해졌다. 사람들이 사회연계망서비스^{SNS}로 소통할 수 있고 온라인 미팅도 숙달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인 접촉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꺼려지기까지 하는 현실이다. 그럼 그 열망을 누가 무슨 서비스로 조직하고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플랫폼 제작자인가, 자본을 가진 사업인가, 협동조합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전부 다일 것인가?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그린뉴딜’ 정책을 국가 성장의 중심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에게 어떤 기회가 될 것인지 자문해본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려면 다시 돌아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는지, 다중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이를 장려하거나 규제하는 법 정책은 무엇인지... 그러나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법인 등록할 때 이에 동의하고 동참할 최소 다섯 명의 친구가 있는 지다.

김형미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협동조합 정체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활동은 조합원의 의지와 사업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그럼에도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기후위기, 재난, 불평등, 분쟁과 난민 문제, 생태계 보호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가 SDGs로 구체화된 지금 협동조합 기업은, 본연의 사업 활동에서 어떤 목표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조합원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난 《생협평론》 40호(2020년 9월 발행)에 수록된 글 〈사회적경제 10년 후, 2030년 우리의 모습〉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해설하고,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을 그 첫 번째로 주장한 바 있다.¹ 이어 1년 만에 SDGs 이행과 협동조합 정체성의 관계를 생각하는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SDGs 이행이라는 국제사회 공통의 과제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에서 SDGs를 포함하게 된 배경과 협동조합 정체성과의 관계를 생각한 다음, SDGs 이행을 위한 한국 협동조합의 과제를 제안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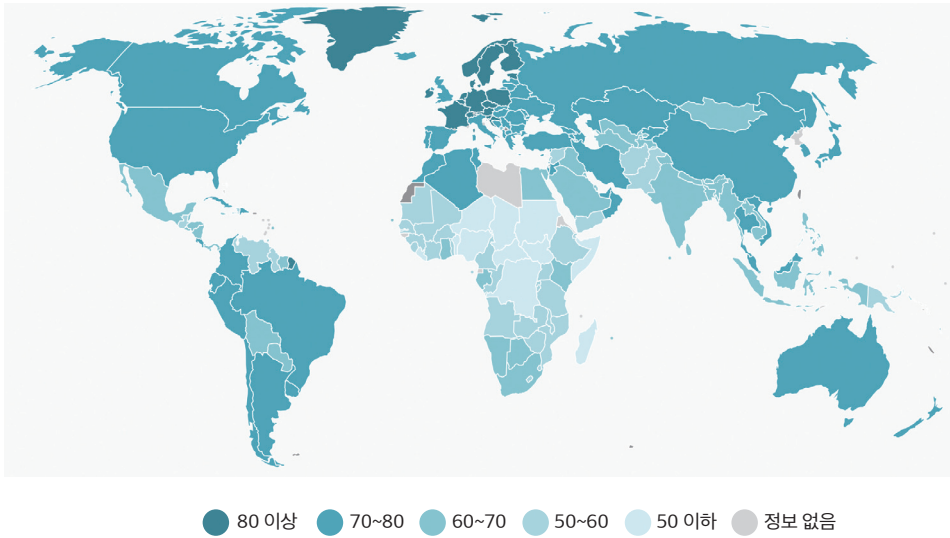
SDGs 이행 정도를 보여주는 상반된 두 개의 지도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채택한 이듬해부터 국제사회는 SDGs 이행을 향한 진척 상황을 측정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로 공표하고 있다.² 2021년에 발행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SDGs 지수는 2015년 65에서 조금씩 개선되다가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낮아졌다. SDGs 지수는 100을 넘어야 순조롭게 목표를 이행하는 것인데, 어느 나라도 SDGs 이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서 SDGs 지수 순위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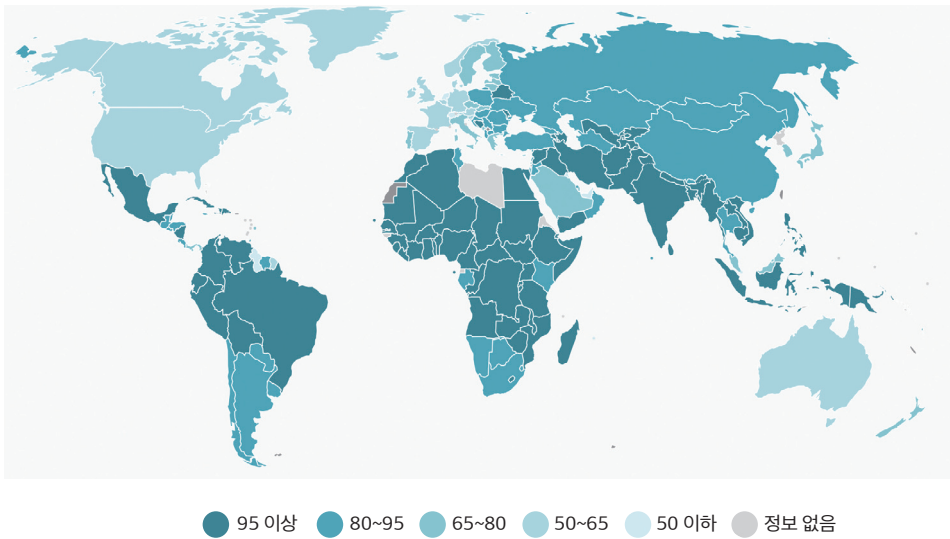
1 이 외에 공공서비스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사람 중심 조직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적화하여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사회적경제를 제안했다.

2 <https://sdgindex.org/reports/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1>

〈그림1〉SDGs 이행 분포도



〈그림2〉SDGs 전이지수 분포도³



³ <https://dashboards.sdgindex.org/map/spillovers>

노르웨이, 프랑스, 슬로베니아가 165개국 중 10위까지를 차지했다. 한국은 28위이고, 앞뒤에 포르투갈(27위)과 아이슬란드(29위)가 있다. 동아시아 나라에선 일본이 18위, 중국은 57위다.⁴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7개 목표 중 목표 4(양질의 교육 보장)에서 목표를 이행했으나 목표 5(성평등 달성), 목표 10(불평등 감소),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목표 14(해양생태계 보존), 목표 15(육상생태계 보호), 목표 17(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고 특히 목표 15는 전년에 비해 더 악화되었다.

SDGs 이행 분포도(〈그림1〉)에서는 짙은 청색일수록 SDGs 지수가 높고, 옅은 색일수록 지수가 낮다. 경제발전 정도와 상당히 겹치는 익숙한 분포도다. 하지만 다른 지표인 SDGs 전이지수 분포도(〈그림2〉)를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SDGs 전이지수는 각 나라의 행동이 다른 나라의 SDGs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표현한다. 예를 들면, 위해 농약 수출, 물 소비가 어려운 나라의 수출품을 수입하는 나라, 수입 제품에 포함된 질소화합물의 양, 해양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수산물 수입국, 위험한 작업에서 생산된 산품을 수입하는 나라, 조세 도피처, 무기 수출국 등을 고려한 수치다. SDGs 전이지수는 경제와 금융, 안전, 무역에 근착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여 산출하는데, 전이지수가 높다면 그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거나 부정적인 전이 영향이 적음을 뜻한다. 분포도를 살펴보면 자국의 SDGs 이행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서유럽, 북유럽 나라들의 전이지수가 오히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SDGs 지수는 85.9으로 가장 높지만 SDGs 전이지수는 69.84이고, 한국의 SDGs 지수는 78.59이지만 전이지수는

4 2016년 이후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킹(SDSN)과 독일 버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에서 작업하여 발표한다. <https://dashboards.sdgindex.org/chapters>

71.63으로 핀란드보다 조금 높다. 미국의 SDGs 지수는 76.01로 중국의 72.06보다 앞서지만, 전이지수는 중국 94.62, 미국 62.14로 미국이 타국에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반된 두 개의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세계화된 지구에서는 선진국의 높은 SDGs 이행 이면에 자국의 환경 부하를 타국에 전가함으로써 자국의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불공정한 현실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SDGs 이행 순위를 전이지수를 포함하여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인식한다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SDGs 이행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함은 명확하다. 이는 세계 협동조합운동이 ICA로 단결해서 실천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협동조합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주목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재건 시기에 스웨덴,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협동조합연맹은 남반구의 협동조합 리더 양성 및 교육기관 설치,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스웨덴 협동조합의 개발협력 기관인 스웨덴협동조합지원센터^{SCC}의 재원에 힘입어 ICA가 인도에 아시아태평양지부를 개설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6년 ‘개발도상국 협동조합에 관한 권고’(제127호)를 채택했고, 2002년에는 이 권고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제193호)를 채택했다. 이어 금융위기의 충격이 전 세계로 확산되던 2009년 12월 제65차 유엔총회에서는 ‘사회발전에서의 협동조합’을 채택하고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했다. 이 결의문은,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의 소득에 공헌하는 사업으로서, 또한 사회적기업으로서 협동조합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분야,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온 권고에 회원국이 관심을 환기할 것”을

명시했다.⁵ 유엔의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언이 한국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 후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 협동조합을 SDGs 이행을 위한 행위자로서 언급했는데, 그 배경에는 20세기 후반 협동조합이 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해온 역사가 있다.

41. (...) 국내 및 국제사회의 공적자금은 필수 서비스와 공공재 공급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타 재원 유치에도 촉매작용을 한다. 우리는 소기업, **협동조합**, 다국적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조직 및 자선단체 등 다양한 민간 부문들이 이 새로운 의제를 실행할 역할을 맡는다고 인식한다.

67. 민간 기업의 사업, 투자, 혁신은 생산성 및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추진자이다. 우리는 소기업, **협동조합**,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민간 부문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창조성과 혁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 ⁶

SDGs 이행과 협동조합 정체성

협동조합이 국내외 사회개발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활동해왔다는 실적⁷ 외에 협동조합이 SDGs 이행에 적극 관여하게 되는 자발적 동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협동조합의 정체성 자체가 지속가능발전과 떼려야

5 <사회발전에서의 협동조합(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73577>

6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dgs.un.org/2030agenda>

떨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지구별 생태계가 공동의 집임을 인식하고 ‘어머니 지구^{Mother Earth}’⁸를 지키기 위한 SDGs 이행에 협동조합 사업을 근착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심화하게 되는 길이 아닐까.

알다시피 1995년에 국제협동조합운동이 채택한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⁹에는 새로이 협동조합 제7원칙이 추가되었다. “커뮤니티 관여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¹⁰는 내용이다. ICA는 협동조합 원칙을 1937년 제정했고 1966년 개정했으며 1995년에 정체성 선언문 속에서 협동조합 원칙을 재정비했다. 그런데 2011년 ICA 칸쿤 총회에서 미주 지부는 제7원칙 본문 중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커뮤니티와 환경의 지속가능성^{concern for commun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제출했고 이는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필자는 이때 아이쿱생협의 대표단으로 참석했는데 남미 협동조합 대표들의 열정적인 제안과 동의에 이어서 여러 대륙에서 온 발원자들이 마이크 앞에 줄을 지어 토론에 참여했던 열기를 기억한다. 이때 <협

7 자세한 것은 “Cooperativ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A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Development Debate”, ILO ICA, 2014, 《협동조합과 지속가능발전 : 포스트 2015 논의에 대한 기여》, 이경수 옮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4.

8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59번 조항에 나오는 표현이다.

9 *Th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는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국제협동조합연맹 선언’ 등으로 소개되는데, 이 글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관련 용어는 모두 ICA/한국협동조합협의회가 2017년 발간한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에 따른다.

10 커뮤니티를 지역사회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community)”라는 개념은 지역(local)을 주로 의미하지만, 그것이 배타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점점 미디어와 가상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연결된 글로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비록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협동조합인은 세계 시민이다.”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202쪽.

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초안을 집필했던 이안 맥퍼슨^{Ian MacPherson, 1939~2013}¹¹ 교수는 미주 협동조합 대표들의 제안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제7원칙의 본문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고, ICA 이사회는 협동조합 원칙위원회를 설치하여 2015년 안탈라 총회에서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를 채택했다.¹² 맥퍼슨 교수의 말대로 제7원칙을 작성할 때 국제협동조합운동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제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식하고 있었고,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회담¹³을 반영해서 1992년 도쿄 대회에서 <협동조합과 환경> 특별 선언문을 채택했다. 안내서에서는 제7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제7원칙은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에 나타난 협동조합 가치에 내포된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그 둘은 “자조, 자기책임”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이다. **협동조합 정체성¹⁴과 가치를 담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제7원칙을 만들어냈다.**

이 두 요소를 결합한 이유는 협동조합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¹¹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역사학 종신교수, 캐나다협동조합연맹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을 설명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또한 2011년 ICA 칸쿤 총회 이후 ICA 이사회가 설치한 ICA 원칙과가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하던 도중 타계했다. 아시아 협동조합운동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생애 후반에는 협동조합과 평화 건설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에는 2008년, 2010년, 2013년 방문했다. 이안 맥퍼슨의 주요 저작은 *One Path to Cooperative Studies : A selection of papers and presentations*(BCICS, 2007)에 수록되었고, 이 책에는 A. F. 레이들로 박사를 기념한다는 헌사가 담겨 있다.

¹² 자세하게는, 김형미, <협동조합 원칙 다시 보기 ① : 『ICA 협동조합 원칙 지침서』 소개>, 《생협평론》 제26호, 2017 봄.

¹³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는 전례 없이 185개국 대표가 참여했고 리우 선언(환경 선언)과 의제 21이 선포되고,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사막화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온난화 방지 및 천연자원 보호 등 국제적인 환경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제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생성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성공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¹⁵

협동조합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협동조합운동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관심을 지역과 국가, 국제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고 꽃피우고 성장시킬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적 관심과 세계적 관심 사이의 연관성은 제7원칙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제7원칙의 문구는 1995년 유엔에서 진행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 토론에서 합의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1987년 유엔 세계환경개발 위원회의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tland Report}라고도 알려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1992년 지구정상회담이라고 불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발표되었다.¹⁶

14 협동조합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협동조합이 자조조직이라는 점이다. 협동의 동기는 상호부조에 기반한 자조로,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의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바람이 협동조합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유인이다. 이러한 바람에서 조합원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약속에 동의하는 것이다. 공동의 노력이라는 이 특징을 잃게 되면 협동조합의 특징은 소멸한다. 더불어 협동조합 기업의 소유자와 고객이 일치한다는 점, 즉 기업의 소유자면서 이용자라는 조합원의 이중 역할은 협동조합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다. 20세기 후반에 조합원의 공동이익 이행을 넘어서 커뮤니티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公益) 이행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여러 나라에서 탄생하고 제도화되었지만, 조합원의 상호자조(mutual self-help)가 협동조합 정체성의 근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 점을 다룬 연구로 전형수, <협동조합법의 목적과 과제 : 조합원 촉진과 협동조합법 구성을 중심으로>《한국협동조합연구》제19집, 2001)와 Hans-H. Münkner, *Ten Lectures on Co-operative Law*(Second, revised edition, 2016) 그리고 올레 타계한 존스톤 버첼(Johnston Birchall) 스코틀랜드 스털링대학교 교수의 《사람중심 비즈니스, 협동조합(People-Centred Businesses : Co-Operatives, Mutuels and the Idea of Membership)》(장승권 외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3)이 있다.

15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193쪽.

16 같은 책, 195쪽.

위 해설은 제7원칙과 협동조합 정체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의와 협동조합 7원칙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맥퍼슨 교수는, 협동조합을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이 가치가 있다고 회고하면서, 협동조합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 협동조합 원칙을 설계하고 협동조합다운 특징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협동조합의 가치라고 했다.¹⁷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운영과 사업의 지침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 원칙과 달리,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정의와 가치(정체성을 구성하는 신념)를 국제협동조합운동이 공유하는 데까지는 100년이 걸려서 겨우 도달할 수 있었다.¹⁸ 협동조합의 가치는 협동조합 철학과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철학이 그 맥락을 구성한다면 협동조합의 경험, 즉 역사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입증해온 사실이라 하겠다.

사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이 ICA에서 채택되기까지는 상당한 논의의 축적이 있었다. 1980년 ICA 모스크바 총회는 《21세기의 협동조합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레이들로 보고서)을 채택했다. 협동조합 이념의 빈곤에 경종을 울리고 21세기 협동조합의 우선 분야로서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 좋은 일을 만드는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소비에 힘쓰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어 1984년 스톡홀름 총회에서는 〈협동조합과 기본적

17 이안 맥퍼슨 교수의 2004년 10월 일본협동조합학회(히로시마) 발표문,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Today : the Impact of the 1995 Co-operative Identity Statement of the ICA”, *One Path to Cooperative Studies*, p.264.에서 재인용.

18 이안 맥퍼슨 교수는 20세기 전반 유럽 중심의 협동조합 판도, 소비자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의 협동조합 인식 차이, 전쟁과 적대적 정치 관계, 냉전으로 인한 이념 대결의 폐해가 장기간 ICA에도 영향을 주어 협동조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형성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위 발표문.

가치>(마커스 보고서)가 제출되어 협동조합이 지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로서 민주주의, 참가, 정직, 타자에의 배려를 제시했다. 이를 더 탐색하고 다듬은 보고서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협동조합 가치>(뵈크 보고서)는 1992년 도쿄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협동조합 가치는 이 뵈크 보고서의 기초를 계승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뵈크 보고서에서 제시한 협동조합의 기본 이념은 평등(민주주의), 공정(사회적 정의), 자유(자발성), 상부상조(사회, 경제적 해방), 경제적 욕구 충족, 사회적 책임(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이며, 협동조합인의 기본 윤리로서 정직, 인본주의(이타심), 연대와 상호주의, 책임과 성실, 정의와 공정, 민주적 사고, 건설적 사고를 제시했다.¹⁹ 그로부터 3년 동안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초안 작성팀은 세계에서 1만여 협동조합인의 의견을 수집하고 여러 대륙의 협동조합 경험을 조사하여 ‘윤리적 기업’²⁰으로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치를 정제하여 선언문에 담았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윤리적 가치를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의 이익(경제적 목적)과 사회의 이익(사회적 목적)이 유리되거나 대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율해야 하며, 양자의 이익과 목적이 모순되는 사업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조·자기책임·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로 열거되는 협동조합의 가치들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이라는 공익^{公共}과 지구생태계 보호, 커뮤니티의 경제·사회적 안정이라는 공익^{公共}의 조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숙명을 협동조합 기업에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19 이건호,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협동조합 가치 : 도쿄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 발표 자료>, 농협대학 농협경영연구소, 농협경제연구보고 제161권, 2006. 지금은 전자파일 형태로 회람되고 있다.

20 ICA는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2013)에서 “기업들의 브랜드에서 윤리적인 척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점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다른 어떤 윤리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견줄 수 없는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있다. 협동조합 정체성의 발현이기도 한 제7원칙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유지를 위해 환경문제에 더 많이 투자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식품 안전과 로컬푸드 생산에 힘쓰게 한다.²¹

사실 협동조합운동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은 오랜 뿌리를 지니고 있지만, 그런 척한다고 치부되거나 더 나쁘게는 아예 인정받지 못했다. 정체성 선언문에 제7원칙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커뮤니티에 대해 많은 사례를 배우고 성장했다. 그 결과, 환경에 대한 더 많은 관심, 로컬 차원에서 협동조합들의 협업, 의료복지와 사회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 더 나아가 협동조합이 공공과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방법을 찾는 데 제7원칙은 도움을 준다.²² 제7원칙은 정체성 선언문 중에서도 협동조합의 래디컬한 전통을 소환했고 더 높은 비전과 역할을 상상하도록 협동조합인들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운동 안팎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SDGs 이행과 협동조합의 과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활동은 일률적이지 않고 조합원의 의지와 사업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그럼에도 전

²¹ Sonja Novkovic, "Defining the co-operative difference",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 Elsevier, 2008, pp.2172-2174.

²² Ian MacPherson, *One Path to Cooperative Studies*, 2007, p.271.

세계가 직면한 빈곤, 기후위기, 재난, 불평등, 분쟁과 난민 문제, 생태계 보호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가 SDGs로 구체화된 지금 협동조합 기업은, 본연의 사업 활동에서 어떤 목표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매년 총회에서 조합원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사업은 대부분 SDGs 이행과 연계해서 정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SDGs 목표 1(빈곤 퇴치) 이행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소득 향상, 금융·공제 서비스 제공, 소비자 채무 경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같은 협동조합 사업이 여기에 정렬될 것이다. 한국의 생협과 농협은 특히, 목표 3(건강과 웰빙 증진), 목표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15(육상 생태계 보호)를 중심으로 SDGs 이행에 직결된다.

이 글을 맺으면서 한국의 협동조합이 SDGs 이행 과정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을 더욱 드러내고 심화하고자 할 때 다음 세 가지 점을 점검하기를 제안해본다.

첫째, 협동조합 사업에서 자원과 폐기물의 흐름을 측정하고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협동조합의 일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목표 12)을 실행해야 할 기업 전부의 과제일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연의 사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협동조합들과 사회적경제 기업들, 지역의 중소기업, 다국적기업, 행정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거나 협업하는 데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협동조합 기업들 중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선순환의 순환경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곳은 아직 극소수인 것 같다.

둘째, 디지털 기반, 탈진실 시대에 협동조합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 환경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리터러시)보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역량)가 중요해졌고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지식 전파보다도 행동의 연쇄와 파급, 즉 무엇을 만드는지, 무엇을 판매하는지, 어떠한 서비스를 이행하는지, 어떤 캠페인을 지원하고 투자하는지, 그 행동 자체가 진정성과 가치로 드러난다. 협동조합 기업의 정체성이 상품이나 서비스로 직접 표현되지 않는 한, ‘위장(위생)’으로²³, 그저 그런 언설로 인식되기 쉬운 시대에 협동조합의 행동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는 노력에 집중하길 바란다.

셋째는, SDGs 지표와 협동조합 사업 지표를 정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통계청)을 발간했다. 17개 SDGs는 231개의 유엔 SDGs 지표를 근거로 매년 유엔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136개 지표를 측정하여 시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게 공표했다. 또한,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올 4월 SDGs 한국 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하여 SDGs 이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에 힘쓰기 시작했다.²⁴ 한국의 협동조합연합회는 이 데이터 플랫폼을 학습하고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활동과 사업에서 SDGs 이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표를 측정하고 보고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이 아니라 국민총행복^{GNH}을 높이는 새로운 지표 개발에 착수했던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 말대로 ‘무엇을 측정하느냐’는 결국 ‘무엇을 지향하느냐’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²³ 그린 워싱, 페어 워싱, ESG 워싱 등 기업과 조직이 내세운 사명, 비전을 전폭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일부만 도입하는 사례, 또는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를 간파한 시민들의 항의와 저항이 커지고 있다.

²⁴ 한국 SDGs 플랫폼. <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사회적경제와 정부

우리는 다양하고 시급한 사회문제와 직면해 있다. 그런데 세상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도 천차만별이라 정부가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와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협력적 파트너십의 핵심 요건이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나친 정부 주도로 인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거에는 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들이 이러한 비판을 선도했다. 철저한 시장주의에 입각한 시각 차이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확대에 대한 반감이 주된 배경이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몇몇 리더십과 일부 호의적인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 비판의 이면에는 정부 주도가 사회적경제의 혁신성, 자립성, 자율성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으며, 적어도 논리적인 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비즈니스를 통해 세상을 혁신하고 변화시킨다. 변화와 혁신에는 때로 정부의 규제나 관행, 낡은 시스템이 그 직접적 대상이 되곤 한다. 따라서 정부와의 과도한 유착은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연한 비판이다. 사회적경제 조직도 일종의 기업모델인데,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지속가능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해악이 된다는 비판도 충분히 타당하다. 정부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선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면 대안적인 경제모델이 되기 어렵다. 재정 의존에 뒤따른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무방비 상태가 되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이 논리적, 경험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현재 한국 사회적경제의 정책 환경 및 생태계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농협과 같은 일부 전통적인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적인 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관련 정책들은 매우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다. 지방정부로 가면 불

균형과 격차는 더욱 극심하여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외에는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잘못된 메시지는 자칫 정책 입안자들의 오해와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이제 겨우 기초를 다지기 시작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기동도 세워보지 못하고 퇴행한다면 고군분투 중인 현장에는 얼마나 큰 손실인가.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해볼 시점이다. 이에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짧은 탐구를 시작해보려 한다. 그 탐구의 말미에는 사회적경제와 정부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일지 소견도 함께 밝혀보고자 한다.

질문 1.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주도로 성장해왔는가?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탓에 정부 의존성이 높고 사회적경제로서의 가치 지향성은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과연 그런가. 지난 시절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는 정부 차원의 철저한 기획과 정책 주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인위적인 자원 배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정책 기획의 주된 고려 대상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 금고 정도가 도시 중심 산업화의 빈틈을 메울 정책 수단으로 배려되었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의 방해물 취급을 받아왔다.

구체적인 사례로 민 주도하에 주민 공동체운동 성격이 강했던 신용협동조합의 입법 과정은 대단히 지난했고, 시민운동 성격이 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

시발길이었다. 신탁의 경우 타 금융기관 관련 법규나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신탁 본연의 성격에 맞는 성장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협법 및 관련 정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물품 취급과 유통에 대한 강한 규제 및 생협 공제사업의 불허로 인해 협동조합다운 성장과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다. 신탁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주무 부처에 전담 인력도 없고 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생협도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기업인데 생협의 주무 부처는 유독 기업을 육성하는 부처가 아니라 규제하고 감독하는 공정위라는 것도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신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금융 당국이 신탁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한 것도 문제인 정부가 처음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생협이나 신탁 정책 수립에 미온적이며 각 조직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소위 비전 있는 정책 수립은 요원하기만 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온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최초이다. 자활 정책이 있지만 자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 복지의 영역으로서 이를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발전해오면서 마을기업 정책들도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다. 이 정도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사회적기업과 같은 일부 정책 대상에 편향되어 있었으며, 그마저도 영리 섹터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단기적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해 예나 지금이나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주도한 적이

없다. 필자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한 수십 년의 세월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편견, 정책적 차별과 규제와의 싸움으로 소진되어왔다.

드물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인 공직자들도 제법 있었지만, 정부 전반의 기류는 여전히 사회적경제에 대해 깊은 신뢰나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영리 섹터에 대해 전방위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정부의 그 주도적인 자세를, 단 한 번이나마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게 우리의 적절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질문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과다한가?

정부의 과다한 지원이 사회적경제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에 해악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비판이다. 수많은 사회적경제인들을 만났지만 과도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분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 현장의 다양한 욕구와 혁신적인 도전을 뒷받침하고픈 마음에 비서관 시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적극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어떤 정책도 현장의 활력과 기대치에 부응할 만큼 충분한 예산이 후속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없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없는 가운데 대부분의 정책을 시범 사업적 성격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다른 정책 대상들에 대한 지원보다 늘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느끼곤 했다.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컸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개소당 280억)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 또한 해당 비판과는 아무런 관

런이 없다.

실제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정부의 지원 체계 위에 비틀거리며 서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정부가 민간의 영리적인 경제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공공기관들만 살펴보자. 중소기업공단과 소상공인공단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적인 지원 인프라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수조 원대 기금도 운용하고 있고 산하에 다양한 창업 및 투자 관련 자회사들도 보유하고 있다. 정책금융을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인프라도 천문학적인 규모다.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코트라,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최첨단의 정부 출연 연구소들, 심지어 산업 분야별로도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설립되어 있다. 환경산업기술원도 그중 하나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공기관들까지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공적 기관들이 기존 시장과 영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경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는 무엇이 있을까. 노동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유일하다. 때문에 필자가 가장 공들였던 일도 정부가 영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수많은 공공기관이 미약하나마 사회적경제 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과다한 지원을 한 적이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기존 영리기업에 대한 지원 인프라와의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사회적경제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말하는 것은 자칫 그나마 있는 미미한

수준의 정부 지원마저 축소시키는 그릇된 명분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라고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질문 3.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적인가?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비판의 척도도 사회적경제가 타 경제주체들에 비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경제는 본래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민간의 모든 경제주체는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환영한다. 기업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시장 수익 외에 정부의 각종 지원, 공공 조달, 절세에 이르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려 한다. 일부 지원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지원 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지원에 뒤따르는 과도한 관리 감독과 규제, 각종 증빙서류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특정하여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거나 지원을 목적으로 소위 불순한 의도로 사회적경제에 진입한 분들이 많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법이다.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사회적기업 등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되는 길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정한 공공성의 원리를 경영 안에 도입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특혜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지 결코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 지원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제도들이 훨씬 규모가 크고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다. 모든 기업들은 수익과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경영 수지가 매우 좋아 굳이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 및 소상공인들도 코로나 등으로 위기에 처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경제주체의 자연스러운 양태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바라거나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여 이들이 특별하게 의존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 지원이 독이라고 말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이든 일반 영리기업이든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더 크고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곳들도 많이 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 성장해왔다. 그렇기에 더 이상 사회적경제에 대해 부당하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런 접근법은 사회적경제 전체의 성장과 다종다양하고 풍성한 생태계 조성에 해악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까지 잘 융합하여 더 많은 사회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멋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곳곳에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 여러 유형의 실패와 시행착오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다. 사회적경제는 완전한 사람들의 결사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 4.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사회적경제는 왜곡되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우선 확인할 것이 있다. 사회적경제를 왜곡시킬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하려는 정부가 존재하는가? 안타깝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과거에 거대해진 농협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자 여러 당근책이 주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거대한 농협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결국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끈질긴 농협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막을 내렸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왜곡될 정도로 통 크게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생각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도 풍부하다. 또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의 정부와 전혀 다른 조직이기도 하다. 설사 사회적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늘린다고 해도 그 지원이 독이 될 수 있는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오늘날의 한국 정부는 지니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면 사회적경제가 왜곡된다는 우려와 비판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이고 주도면밀한 의지를 갖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언제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잉을 실제로 고민해야 할 날을 한 번쯤은 마주하고 싶다.

사회적경제와 정부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필자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우리는 다양하고 시급한 사회문제와 직면해 있다. 그런데 세상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도 천차만별이라 정부가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쉽

지 않다.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와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협력적 파트너십의 핵심 요건이다. 다만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파트너십의 주체가 되기에 아직 미약하다. 사회적경제가 일정한 규모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다만 여전히 우리의 고민은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미온적이며,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 해결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사회적경제는 정치의 역할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정치라는 효과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지원에 우려하는 미래적 시점의 논쟁을 상당 기간 유보해야 한다. 그보다는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통해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더욱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자.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저 낮은 자리에 웅크리고 있다.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도록 강력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과잉도, 의존도 아닌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다.

김 아 영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아이쿱펠로우 연구교수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는 한국 생협의 실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정부, 기업, 민간 중 어느 한 주체에 의해 또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으려면 모두가 같이 참여해야 한다. 한국 생협들이 같이, 생협을 넘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같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넘어 모든 인류가 같이.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여는 행사로 존 휴스턴^{John Houston}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존 휴스턴은 캐나다 퀘벡주 북부 누나빅^{Nunavik}에 있는 FCNQ^{La Fédération des coopératives du Nouveau-Québec}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

FCNQ는 누나빅에 사는 이누이트^{Inuit}가 설립한 여행협동조합연합회다. 이누이트 공동체는 자연과 그들의 사회적·문화적 전통을 통해서 누나빅에 방문한 여행자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개발을 극복한 이누이트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Atautsikut>는 이누이트 말로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ne Behind}라는 뜻을 담고 있다.¹

이누이트 공동체는 FCNQ의 ‘Atautsikut’라는 원칙이 지난 50여 년 동안 그들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원칙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글로벌 정책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1967년 설립된 FCNQ의 가치와 SDGs가 일치하는 것은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하 ICA)이 적극적으로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과 함께 SDGs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지를 잘 보여준다.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는 SDGs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서 협동조합 정체

1 <https://leavingnonebehind.com/>

성을 성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²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The Guidance Notes on the Cooperative Principles}》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대중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전 과제들을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릴 책임이 있으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은 협동조합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는 ‘사회적’ 또는 ‘윤리적’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며,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지속가능성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한다. 협동조합이 이러한 기업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으며, 앞으로의 도전이기도 하다. ICA는 협동조합이 어느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한다.(ICA, 2013) 즉, 협동조합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협동조합은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언제나 앞장서왔다. 이것은 오늘날 지속가능성이라 불리는 일련의 가치에 상응하는 거래를 해왔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필요

2 노윤정 기자, <[ICA 서울대회] “협동조합 진영의 고민 현재화해야... 좋은 질문이 좋은 답 만든다” : 임형식 ICA 전략통계담당 인터뷰>, 《라이프인》 2020. 9. 8.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158>

를 협동조합의 중심에 둬으로써 오늘날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고, ‘공유가치’라는 독특한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성을 집합적으로 추구한다. 협동조합은 어느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협동조합 부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동기와 정당성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지금과 같은 역사적 시점에 왜 협동조합이 필요하고 유용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다.³

최근 스위스 취리히 응용과학대학^{ZHAW}의 생물공학자와 식품공학자들이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를 인공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실험실에서 만든 코코아를 사용하여 만든 초콜릿은 모양이나 식감이 기존의 초콜릿과 똑같은 것은 물론이고 향은 오히려 더 강하다고 한다. 초콜릿의 25가지 향을 가진 키트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현재 실험실에서 초콜릿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기존 초콜릿 가격의 6배쯤 되지만 대량생산이 이뤄지면 값은 낮아질 수 있다. 이제 코코아를 수입하지 않고도 스위스 내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⁴

연구진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실험실 초콜릿은 현실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기존 초콜릿의 훌륭한 대체품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코코아를 아프리카에서 스위스까지 수입해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발자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코코아 재배 시 필요한 화학 살충제를

3 ICA,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2013, p.14.

4 <https://www.swissinfo.ch/eng/lab-developed-chocolate-passes-the-taste-test-/46766404> (2021. 8. 5. 검색)

쓰지 않게 되므로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의 코코아 재배 농가에서 불법으로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⁵

탄소발자국과 토양오염 감소, 아동 노동력 착취 근절 등은 SDGs와 연결된다. 그러나 이윤 구조의 불공정함으로 악명이 높은 초콜릿 산업의 특성을 생각해본다면 실험실 초콜릿은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기아 종식·식량안보 달성·영양 상태 개선·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등 다른 SDGs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SDGs를 개별적인 17개 과목의 169개 문제 풀이로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경제·환경 등 전 분야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할 때 가능하다.

협동조합이 집합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노력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다. 코오프 스웨덴^{Coop Sweden}은 2021년 스웨덴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자체 브랜드 모든 상품에 지속가능 라벨 시스템을 도입했다. 앱을 통해 식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① 생물다양성 ② 기후 ③ 토양비옥도 ④ 수질오염 ⑤ 농약 ⑥ 부영양화 ⑦ 동물복지 및 항생제 ⑧ 노동환경 ⑨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 ⑩ 법규 준수 및 투명성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지속가능함을 나타낸다. 또한 모든 포장 육류 및 생선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교체하여 연간 57톤의 새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2030년까지 PB상품 및 매장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 기반의 플라스틱을 100퍼센트 재생 가능 플라

5 김진경, <가짜 초콜릿이 노동착취·환경파괴 대안 될 수 있을까?>, 《시사IN》 2021. 8. 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81>

스틱 혹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주스와 생수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전환했고, 주스병에는 보증금을 도입하여 재활용 애플 ‘Bower’를 사용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

일본생협연합회는 2018년 6월, 전국에 있는 생협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상품의 공급과 생활의 개선, 세계의 기아 및 빈곤의 근절과 아이들을 위한 지원 활동, 핵무기 폐기와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활동 추진, 누구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참여, 복지사업 및 서로 돕기 활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생협 SDGs 행동 선언’을 발표하고 의미 있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사회와 환경을 배려한 재료로 만든 상품을 표시하는 ‘코업 서스테이너빌리티^{Coop Sustainability}’ 마크를 개발했으며, 5월에는 코프 상품의 ‘책임 있는 조달 기본 방침’이 포함된 ‘코프 상품 2030년 목표’를 발표했다.

‘책임 있는 조달 기본 방침’의 내용은 ① 상품의 공급망에 대한 사회적 책임^{CSR} 과제에 대응 ② 환경, 인권 등을 배려하여 생산된 농림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상품 취급 확대 ③ 생산자나 NGO 등과 협력 관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생산 체제의 지속과 향상 ④ 플라스틱 및 종이 문제에 대응 ⑤ 식품 낭비 감소 등이다. 일본생협연합회는 ‘코프 상품 2030년 목표’를 통해 2030년까지 달성할 원료(농·수산, 종이·펄프, 팜유, 플라스틱, 식품 낭비)의 지속가능한 조달 목표를 정하고 전국에 있는 생협과 협력하며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의 공급과 윤리적 소비에 공감할 수 있는 소비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⁷

6 세이프넷지원센터 국제팀, <코업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식품 공급을 위한 노력과 플라스틱 전환>, SAPeNet, 2021. 4. 30. <http://sapenet.net/archives/8017803>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협동조합 정체성

협동조합은 결사체와 사업체로서 양면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먼저 협동조합은 공통의 사회·경제·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결사체로서 자본을 투자한 일부 소수가 아니라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많은 조합원을 위해 편익을 창출한다. 다음으로 공통의 필요와 염원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해 충족된다. 협동조합은 세계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혁신은 협동조합 기업의 원동력이 된다.

ICA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거울에 비치는 모습으로, 협동조합 섹터와 조합원들이 인식하는 협동조합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ICA, 2013)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인정된 정의와 원칙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협동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거버넌스와 경영에 협동조합의 7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협동조합 원칙은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경제·문화·사회·법률·규제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고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할 엄격한 규칙도 아니다.(ICA, 2017)

그렇다면 협동조합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할까? 연구자들은 조직의 중심이 되며 다른 조직과 구분되는 동시에 일정 기간 지속하는 속성을 조직 정체성이라고 정의한다. 즉, ‘우리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조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직의 핵심적 가치와 조직 문화, 신념 체계 등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7 세이프넷지원센터 국제팀, <일본 생협 ‘코프 상품 2030년 목표’ 발표>, SAPENet, 2021. 5. 26.
<http://sapenet.net/archives/8018079>

조직 행동의 숨겨진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Albert & Ashforth & Dutton, 2000) 조직 정체성의 형성 또는 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하나는 조직 정체성을 관련 조직이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의미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다. 이들은 조직 정체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단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Pratt & Foreman, 2000; Scott & Lane, 2000) 협동조합은 150여 년 동안 사회·경제·환경적 상태와 조응하며 생존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변화와 도전에 맞춰 정의와 원칙에 관한 토론과 실천이 이어지며 협동조합 정체성을 구성해가고 있다.

한국의 SDGs 이행과 생협 실천

협동조합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 ICA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그들이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개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협동조합은 하나 이상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성을 유지해야 한다.(ICA, 2017)

1980년 후반, 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시민의 역량을 토대로 성장한 한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협동조합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경제적 성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생협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르면서 조합원과 사회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을 통해 협

동조합 정체성을 구성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제는 SDGs와 연결되면서 지역과 국가,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UN이 제시한 SDGs를 이행하기 위해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 및 214개의 지표로 구성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를 수립했으며, 2020년에 세부 목표 119개와 지표 214개로 개편했다. SDGs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체와 민·관·학 공동 작업반, 이해관계자 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다.(유용조, 2020)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SDGs 달성 정도는 얼마나 될까? 지난 3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7개의 글로벌 목표를 사람, 지구환경, 번영, 평화,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한국의 SDGs 이행 결과와 생협이 실천을 연결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한국 SDGs 이행과 생협의 실천

기본 정신	목표	SDGs 이행 결과	생협의 실천
사람	①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②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③ 건강하고 행복한 삶 ④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⑤ 성평등 보장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품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 농·축·수산물 가격변동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음 • 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성 수준 낮음 •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별 공공의료 자원 분포율 격차 있음 • 친밀한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증가	• 공정무역/민중교역 •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외 나눔 운동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내외 단체 생활자금 및 의료비 긴급 지원 • 가격안정기금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폭락 보완 • 친환경농산물 가격 인하 •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활동 •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리더 역량 강화 • 돌봄 서비스의 상호부조 사업화

지구	⑥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⑭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⑮ 기후변화 대응 ⑯ 해양생태계 보전 ⑰ 육상생태계 보전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지속 -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유해한 폐기물 증가 속도 빠름 -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류 발생 지속적 증가 - 해양 쓰레기 수거량 2015년 이후 증가세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상품 개발과 공급 - 자원순환을 위한 포장재 개선 - 생산안정 기금 및 지속가능 생산을 위한 자본 조성 - 음식쓰레기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 자원순환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 기후위기 대응 실천 : 캠페인, 조합원 교육, 활동가 훈련, 제도개선, 연대 활동 -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 및 세탁수 미세플라스틱 제거 장치 상품화
번영	⑦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⑧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⑨ 산업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 확충 ⑩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 여성의 평균 시간당 실질임금이 남성보다 낮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실질임금이 정규직보다 낮음 - 상대적 빈곤율이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 공공 공간 비율의 지역 차이가 큼	-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 햇빛발전협동조합 - 성, 나이, 학력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고용 -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최저시급 1만원 -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 - 임금 격차 감소를 위한 노력
평화	⑫ 정의·평화·효과적인 제도	-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 추세 - 아동학대 발견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음 -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 가장 많음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연대 : 캠페인, 제도개선 활동
파트너십	⑬ 지구촌 협력 확대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비율을 달성하지 못함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참여 - 국제 개발 협력 활동 - 국제교류

먼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5개의 목표’ ①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②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③ 건강하고 행

복한 삶 ④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⑤ 성평등 보장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수준에 낮을수록 식품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가격변동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빨간불이다. 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지방의원의 비율도 남성보다 낮았다. 특히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

자연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강조하는 생협은 서로의 삶을 지지하기 위한 연결을 만들고 있다. 공정무역을 통해 제3세계 생산자와 연대하고 있으며, 지진이나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국내외 이웃들의 손을 다양한 방식으로 잡고 있다. 생활자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먹거리를 나누며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있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먹거리를 넘어 생활의 협동을 만드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지구에 대한 목표’ ⑥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⑫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⑬ 기후변화 대응 ⑭ 해양생태계 보전 ⑮ 육상생태계 보전에 대해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산·폐알칼리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감염성 폐기물과 같은 유해 폐기물 발생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코로나19 이후 확진자나 격리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 배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류 발생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생협은 사업과 운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증 ‘MSC 에코라벨^{Eco-Label}’을 받은 참치 통조림의 공급을 위해 펀딩을 진행하고 자원순환을 위해 포장재를 개선하며 종이팩과 식물성 포장 용기로 만든 생수를 공급한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플라스틱의 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혼합플라스틱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 사회, 기술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목표’ ⑦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⑧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⑨ 산업혁신과 사회 기반시설 확충 ⑩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에 대해 살펴보면,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으며,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높아졌고, 여성의 평균 시간당 실질임금은 남성의 실질임금보다 더 낮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실질임금 역시 정규직의 실질임금보다 더 낮으며, 상대적 빈곤율이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사회의 변화에 협동조합답게 조응하기 위한 생협은 SDGs 이행을 위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직면하고 함께 도전한다. 사람과 자연에 해가 없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거부하고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전한다.

‘공포와 폭력에서 자유로운 포용적인 사회와 2030 의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에 대한 목표’ ⑯ 정의·평화·효과적인 제도 ⑰ 지구촌 협력 확대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발견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을 묻는 말에 응답자들은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 고용 형태,

학력, 신체적 조건의 순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협동조합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내용이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하며, 협동조합 조합원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념으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SDGs 이행 결과와 생협을 살펴봤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정부나 기업, 민간 중 어느 한 주체가, 또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생협들이 여러 영역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러한 실천이 생협이어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생협의 많은 이해관계자가 고군분투하면서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으려면 모두가 같이 참여해야 한다. 한국 생협들이 같이, 생협을 넘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같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넘어 모든 인류가 같이.

[참고문헌]

국제협동조합연맹(ICA, 2013),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국제협동조합연맹(ICA, 2015),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The Guidance Notes on the Cooperative Principles*), 한국협동조합협의회, 2017.
박영실·홍현정·진유강·윤민희·이은경,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통계청, 2021.
유용조, <우리나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Albert, S., Ashforth, B. E., Dutton, J. E., "Organizational identity and identification : Charting new waters and building new bridg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000. pp.13~17.
Scott, S. G., Lane, V. R., "A stakeholder approach to organizational ident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000. pp.43~62.
Pratt, M. G., Foreman, P. O., "Classifying managerial responses to multiple organizational identit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000. pp.18~42.
두레생협연합회 홈페이지 <http://dure-coop.or.kr/>
아이쿱생협 홈페이지 <https://www.icoop.or.kr/>
한살림 홈페이지 <http://www.hansalim.or.kr/>
행복중심생협 홈페이지 <http://www.happycoop.or.kr/>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해피브릿지협동조합 고문

이행 전략과 협동조합 연대 전략의 연계

한국 협동조합의 정체성 증진과 동질성 회복, 협동조합을 통합하고 대표하는 연합 조직 건설을 통해 포부 있는 협동조합 발전 구상과 계획을 펼쳐나가는 데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 새로운 10년의 전환기, 전열을 정비하고 21세기 한국 협동조합의 내일을 개척하기 위한 협동조합운동의 구상과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193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종료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의 공동 목표이자 최대 과제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국제연합 회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기업 등 주요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동 협력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분야와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시행된 이후 전 세계 각국 정부와 많은 민간 부문의 주체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과 협동조합의 협동과 연대를 증진하기 위한 연대 전략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만들고, 각각의 성과를 높이는 연계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 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는 5P(People·사람, Planet·지구환경, Prosperity·번영, Peace·평화, Partnership·파트너십)의 기본 정신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3대 축(경제,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한 4대 아젠다(빈곤 종식, 불평등 격차 해소, 질적 성장, 환경문제 극복), 17개 목표^{Goals}와 169개 표적^{Target},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100개의 지표^{Indicators}로 구성된다.¹

1 국제연합(UN) www.un.org

밀레니엄개발목표와는 달리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범위에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포함하며, 참여 주체와 개발 재원도 정부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자들도 넓혔다. 또한 회원국의 이행과 이행 실적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강한 의미의 연성 국제법^{soft law}’으로서 매년 회원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와 단체, 기업에 대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구속력을 갖는다.²

이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전략을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 사회에 처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K-SDGs를 수립”했으며,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 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과 같은 5대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19개 세부 목표, 236개 지표(제4차 기본계획 기준)를 설정하여 정부 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룹 등 다양한 집단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³

2 송재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 협동조합의 역할〉,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4집 3호, 2016, 143쪽.

3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포털 www.ncsd.go.kr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⁴

기본 정신	목표	세부 목표 개수
사람 People	①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No Poverty	7
	②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Zero Hunger	8
	③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od Health and Well-being	13
	④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Quality Education	10
	⑤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Gender Equality	9
	⑥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Clean Water and Sanitation	8
지구환경 Planet	⑦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Affordable and Clean Energy	5
	⑫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1
	⑬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Climate Action	5
	⑭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Life Below Water	10
	⑮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Life On Land	12
번영 Prosperity	⑧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12
	⑨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8
	⑩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ing Inequality	10
	⑪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0

평화 Peace	⑯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2
파트너십 Partnership	⑰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Partnerships for the Goals	19

2. 협동조합과 지속가능발전목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전부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유사성이 크다. 이러한 내용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2014년 공동으로 발간한 정책 브리핑 보고서 《협동조합과 지속가능발전 : 포스트 2015 논의에 대한 기여》⁵를 통해 자세하게 정리했다.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탄생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에서 채택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26개 우선순위 항목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국제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절차에 협동조합 진영의 참여를 제안했고, 국제협동조합연맹은 2014년부터 공개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에 참여하게 된다.⁶

4 유웅조, <우리나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5 “Cooperativ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A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Development Debate”, ILO ICA, 2014, 《협동조합과 지속가능발전 : 포스트 2015 논의에 대한 기여》, 이경수 옮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4.

6 송재일, 앞의 글, 151쪽.

한편 국제협동조합연맹은 2019년 키갈리 총회에서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촉진’^{Promotion of the cooperative identity}, ‘협동조합운동의 성장’^{growth of the cooperative movement}, ‘협동조합 간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과 함께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를 포함하는 2030 전략 계획을 검토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2020-2030년 전략 계획인 “협동조합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사람 중심 계획”^{A People-centred path for a Second Cooperative Decade} 네 번째 항목인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는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을 촉진하고 사람의 경제 및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여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 SDGs에 협동조합의 기여에 대한 지표 정의, 2) SDGs에 협동조합의 기여에 대한 리포트, 3) SDGs에 기반한 옹호 발전, 4) 협동조합의 국제 발전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운동의 이니셔티브 심화 등 네 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⁷

국제 협동조합운동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고 2020-2030 전략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울 세계협동조합대회 등 주요 프로그램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를 비중 있게 다루어 나가면서 협동조합운동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⁷ 국제협동조합연맹(ICA), “A People-Centred Path for a Second Cooperative Decade 2020-2030”, 2019.

3. 한국 협동조합운동 현황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개별 법제를 유지하면서 농협, 신협, 생협 등 8개 개별 입법을 통해 협동조합을 제한해왔다. 그러던 중 국제연합이 2009년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과 제한을 없애는 권고를 담은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협동조합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면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계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를 만들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개별법에 한정되거나 사적인 차원, 제한된 방식에 머물던 수준에서 전면적, 조직적, 보편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신생 협동조합이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더욱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다. 그 가운데 약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2만 개를 초과하는 협동조합 설립등록 수를 기록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적지 않은 지역과 업종에 협동조합 연합 조직이 만들어졌으며, 급기야 2019년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탄생했다.

2021년 현재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11개 광역 단위 지역 조직과 6개 전국 업종 조직, 총 17개 회원으로 구성된 유일한 전국 협동조합 조직이다. 아직 미조직된 부분도 있고 충분한 역량과 기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탄생은 지역과 업종을 포괄하는 전국적 수준의 협동조합운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창립과 함께 인상적인 성과는 기본법과 개별법의 구분을 뛰어넘는 연대 협력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직 일부분이기기는 하지만 몇몇 단위 신협은 기본법 협동조합들에 대한 금

용서비스를 의식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규모 있는 생협은 기본법 협동조합들의 설립과 판로를 돕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위 생협과 단위 신협이 기본법 협동조합들과 동등하게 지역 조직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례, 생협과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로컬푸드 이중 협동조합연합회를 공동 설립하는 사례 등 법제의 장벽을 넘어서는 연대 협력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살림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이 ‘한국협동조합국제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공동 가입하고 서울 세계협동조합대회를 준비하며 공동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최근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가입함으로써 이미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생협, 신협 등과 보다 의식적인 연대 협력을 추구한다면 비록 한국 협동조합을 모두 포괄하는 연대 협력의 범위와 구조를 당장 실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를 자아낸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개별 가입된 농협, 신협 등 7개 개별법 협동조합들과 생협으로서는 유일하게 개별 가입한 아이쿱이 참여하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와 한살림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협동조합국제연대’의 2개 단체가 한국의 협동조합을 양분하는 모양새고, 전국협동조합협의회와 대부분의 생협, 단위 신협 일부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가입되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4. 협동조합의 연대 전략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020년 ‘2030 정책 디케이드^{Decade}’를 채

택하고 한국 협동조합의 연대 협력 증진을 통한 협동조합운동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⁸ 많은 협동조합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의 논의를 종합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 단계 한국 협동조합의 연대 전략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⁹

첫째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향상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은 국내법에 따라 구별되는 협동조합이지만 국제적 기준으로는 차이 없는 협동조합이며, 모두 국제 협동조합연맹 회원이다. 따라서 국제 협동조합운동이 표방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본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실제로 거의 모든 생협연합회와 일부 단위 신탁은 법제상 구분을 의식하지 않고 기본법협동조합과의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는 협동조합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질곡의 역사가 남긴 흔적으로 대부분의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중심부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에 소극적이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내부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확인된다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상호 유대감을 형성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고 큰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증진 활동은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주요 부분이 되어야 하고 법제의 구분을 넘어서는 동질성 회복은 협동조합운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체 협동조합의 정

8 전국협동조합협의회, <2030 정책 DECADE 해설서>, 2020.

9 박강태,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종합보고서>,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체성 증진과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일정 수준까지 동질성이 회복되는 성과에 이른다면 이후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비약적인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둘째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협동조합을 모두 포괄하는 연대 조직인 한국협동조합총연합^{KCA}을 결성하는 것이다.

1992년 도쿄 세계협동조합대회가 개최된 지 거의 26년 만인 2018년에 협동조합총연합 격인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가 결성되었다.¹⁰ 협동조합 연합 조직을 통해 일본 협동조합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상호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었고 더 큰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협동조합총연합의 존재는 한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연대 협력이 극대화되고 해당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여를 최대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기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협동조합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인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목표이다. 향후 10년 또는 20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들지도 모를 일이지만 한국협동조합총연합은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로 통합된 한국 협동조합이 하나의 통일된 협동조합운동을 규모 있게 이끌어간다면 우리 사회는 협동조합의 의미와 가치를 확연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보다 튼실한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루는 역할과 기여를 하는 데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셋째는 단일한 대오를 형성한 한국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및 지역 사회와 연대하여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10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日本協同組合連携機構, JCA) www.japan.coop

협동조합 정체성을 증진하고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조직을 만드는 일의 궁극적 목적은 더 효과적으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세계관을 실현하고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 첩경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충족해가는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조직화의 진전, 연대 협력의 구조적 발전을 이끄는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역할과 책무는 아주 중요하다.

5. 이행 전략과 연대 전략의 연계

국제협동조합연맹의 2020-2030 정책 계획이 제시하고 있듯이 한국의 협동조합도 자신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개선과 분발이 요구된다. 한 사회의 협동조합이 갖는 연대의 수준과 협동조합이 펼치는 전략의 효과는 연동될 것이다. 따라서 이행 전략과 연대 전략은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필요충분조건이다. 협동조합이 통합된 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면 통일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 전략의 수립과 실행은 요원할 것이다.

흩어져 있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 전략에 관한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립하는 대화와 토론은 협동조합 연대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연대 전략의 각 단계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세계협동조합대회 준비를 통해 가급적 많은 협동조합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 전략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

함으로써 한국 협동조합의 계획과 의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정체성 향상과 동질성 회복에 이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검토해볼 만한 제안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국제협동조합연맹의 2020-2030 전략 계획을 구체화해 자신의 전략 계획으로 승인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 전략을 포함한 한국 협동조합의 미래 계획과 비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하고 제시할 수 있다면,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의의가 배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협동조합연맹 측의 행사 준비 계획과 의사와는 별개로 각 부분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 기구를 만들고 최소한의 공식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한국 협동조합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다. 이를 계기로 서울 세계협동조합대회 이후 한국 협동조합의 상설적 관계와 교류가 자리 잡히고 이를 기반으로 정체성과 연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천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면, 한국 협동조합은 이번 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것이다.

한국 협동조합도 국제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미 여러 방면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제사회의 아젠다에 조응하여 자신을 설명하는 데에 관심이 적고 익숙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협동조합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를 높이는 데 관심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다.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한국 협동조합의 기존 활동과 활약상을 종합하고 협력적 계획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의제 문법에 맞춰 협동조합 내외부에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념해야 할 것은 이러한 노력조차 한국 협동조합의 연대 수준을 높이는 연대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6. 맺음말

2015년 국제연합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한 이후 전 세계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2020-2030 전략 계획에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고 향후 10년간 주요한 전략 과제로 설정했다. 그리고 2021년 제33차 서울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는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Deepening our Cooperative Identity}’와 함께 국제연합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협동조합의 공헌 강화’를 핵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다.¹¹

한국 협동조합은 국제사회 의제에 조응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대한 관심과 경험이 아직 부족한데, 이는 한국 협동조합을 통합하고 대표하는 조직이 부재한 현실과 관계가 크다고 평가된다. 부분적으로는 시도하고 있다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한국 협동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협동조합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높이지 않으면 지속가능발전목표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본령조차도 그 가치와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회 의제에 대한 영향력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제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지구촌이 직면한 절박한 문제들과 과제들을 망라하고 이전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동원한 가운데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는 인류의 도전을

¹¹ 국제협동조합연맹(ICA) www.ica.coop

이끌고 있다. 애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그 어느 주체보다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가깝게 서 있다. 한국 협동조합도 그 규모와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사실이다.

한국 협동조합의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 전략은 하루 빨리 수립될수록 유익하다. 상시적인 연대 구조가 없더라도 ‘협동조합 지속가능발전 라운드’ 같은 의제 연대를 통해 부분적인 협력을 우선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만으로 향후 10년은 한국 협동조합들이 모이고 대화를 가질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상설 연대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협동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 전략에 관한 활동은 협동조합 연대 전략과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고 의식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자.

한국 협동조합은 8개의 개별법과 1개의 기본법이 병존하는 법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법의 편제에 따른 분절이 상당하다. 또한 단결과 질곡의 역사를 거쳐 역동의 20세기를 속절없이 지나 보낸 뒤에야 21세기 현재의 대한민국 환경에서 드디어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이러한 역사적 제약과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긍정적 변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기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한국 협동조합의 정체성 증진과 동질성 회복, 협동조합을 통합하고 대표하는 연합 조직 건설을 통해 포부 있는 협동조합 발전 구상과 계획을 펼쳐나가는 데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 새로운 10년의 전환기, 전열을 정비하고 21세기 한국 협동조합의 내일을 개척하기 위한 협동조합운동의 구상과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송재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 협동조합의 역할〉,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4집 3호, 2016.
- 박강태,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종합보고서〉,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 2030 협동조합 미래기획 대토론회》,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 박강태, 〈2030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역할과 과제〉,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 2030 협동조합 미래기획 대토론회》,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 유용조, 〈우리나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 ILO·ICA, “Cooperativ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A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Development Debate”, 2014, 《협동조합과 지속가능발전 : 포스트 2015 논의에 대한 기여》, 이경수 옮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4.
- 국제연합(UN),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Resolution No. 64/136”, 2009.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A People-Centred Path for a Second Cooperative Decade 2020-2030”, 2019.
- 국회·UN·SDGs포럼 외 주최,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전략〉 국회 세미나 자료집, 2015.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 2030 정책 DECADE 해설서〉, 2020.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협동경제개발프로젝트(CEDP) 보고서〉, 2021.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 :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 2019.
- 국제연합(UN) www.un.org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www.ica.coop
-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日本協同組合連携機構, JCA) www.japan.coop
- 환경부 지속가능 포털 www.ncsd.go.kr

이
슈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향해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의 지치지 않는 도전

조유성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 사업본부 직원,
치바사회적연대경제연구소 연구원



들어가며

한국 고속 경제성장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 중 한 명인 어머니는 네 남매 중 막내, 아버지는 오 남매 중 둘째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모두를 돌아가며 돌보는 역할을 떠맡았다. 그분들의 요양병원·방문요양서비스 자기부담금과 생활비는 남매들이 분담했다. 이는 5060세대인 부모님이 8090세대인 그들의 부모님을 돌보는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그다음 세대는 어떠한가. 결혼에 관심이 없거나, 안 하거나, 못 했다. 미래에 다가올 부모님의 돌봄 문제에 대한 대비는커녕 용돈을 드리는 것도 어려울지 모른다. 그리고 세계 최저 출산율의 주역인 지금의 30대가 노인이 되는 시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¹ 나라의 공간은 줄어들 것이고, 내 지갑은 가벼워질 것이다. 지금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해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과 삶의 원동력이 되어 한살림서울에서 돌봄사업을 담당하던 때,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生活クラブ風の村)’에 연수를 간 적이 있다. 특히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살고 싶은 곳’을 각 지역 조합원 대표들이 고민하여 만든 입주형 노인홈이 기억에 남았다.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온 곳,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부지런히 추진해온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 땀 흘리며

¹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은 0.84를 기록했고, 2045년에는 세계 최고의 노인인구비율(37%)을 보유한 국가가 될 예정이다.

실천해보고 싶어서 현재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에 와 있다.

바람의 마을은 1976년 설립된 생활클럽생협치바가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사회복지법인이다. 개호보험²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조합원의 자발적인 상호부조 활동이 있었고, 이 같은 활동을 사업화하여 전국 생협 최초로 홈헬프 사업의 싹을 틔웠다.³ 이후 조합원, 위커즈, 실무 리더들이 돌봄사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세웠다. 현재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 생애 전 영역에 걸쳐 103개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연간 6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치바현 최대의 사회복지법인으로 3000여 명의 이용자, 180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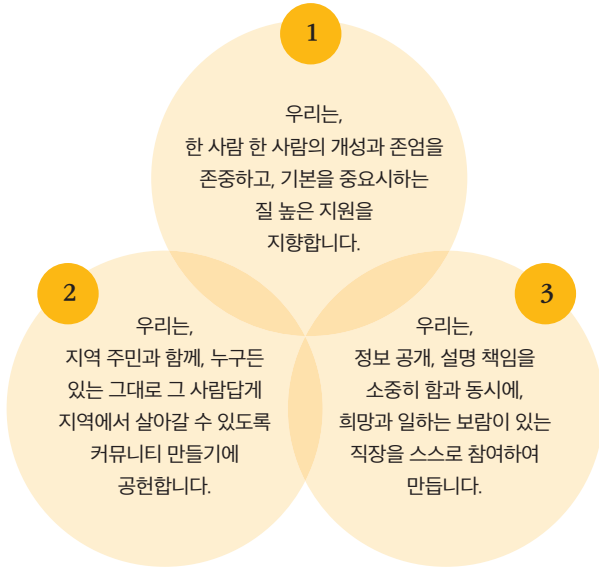
1. 질 높은 케어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용자 삶의 시선에서 돌봄을 바라보는, 아웃컴 평가와 피드백

‘바람의 마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바람의 마을의 모든 사업 계획과 추진 배경의 출발점이 되는 ‘바람의 마을의 이념’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질 높은 돌봄’이다. 당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당신이 받는 서비스 제공 조직의 법인격이 무엇인지, 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보다는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돌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존엄이 지켜지는지, 충분히 질

2 한국의 장기요양보험(2008~)과 유사한 일본의 사회보험. 와병 생활과 치매 등의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부담을 사회 전체에서 나누어 분담할 목적으로 2000년 4월에 시작했다.

3 청소, 빨래, 식사 차려드리기 등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1994년 생활클럽생협치바 서로돌봄 네트워크 사업(홈헬프 사업)을 시작했고, 개호보험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방문돌봄 서비스로 이어져오고 있다.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바람의 마을은 이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 이념을 지켜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핵심이 ‘아웃컴 평가’이다.

돌봄 서비스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결과^{outcome}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⁴ 바람의 마을은 ‘질 높은 돌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용자와 그 이용자를

4 아베디스 도나베디안(Avedis Donabedian, 1988)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의 질은 구조-과정-결과 측면에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다. 구조는 돌봄을 제공하는 물리적 속성(재정, 시설, 장비), 인적 자원(직원 배치, 질), 조직 구조(동료 평가 방법 등), 과정은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내용, 결과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효과(기능 향상, 긍정적 행동 변화, 돌봄 만족도 등)라 할 수 있다.

바람의 마을 아웃컴 평가 개요

조사명	내용 및 목적
이용자 ASCOT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생활 측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돌봄 제공자의 가치관, 전문적 판단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느낌과 생각'에 더욱 귀를 기울여, 이에 따른 지원을 검토한다. 이용자의 경험 내용을 중심에 놓고 돌봄 제공자들이 협동하고, 자원을 제휴할 수 있는 돌봄 체제를 만든다.
케어러 ASCOT	케어러(주로 이용자의 가족)가 생활하면서, 돌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케어러도 '지원 대상'으로 여기고, 필요에 따른 지원을 검토한다.
WHO-DAS 2.05 ⁵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 근거를 둔 포괄적인 생활 기능의 장애 정도를 파악한다. → 이용자에 대한 질병이나 신체 기능에 그치지 않고 사회 참여·활동을 의식한 지원을 검토한다.

돌보는 가족의 생활을 바탕으로, 신체적·생리적인 면을 넘어서 사회적·심리적인 이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평가·피드백 방식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

ASCOT와 WHO-DAS 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경험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데, 이 중 가장 메인이 되는 ASCOT 조사의 주요 항목으로는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본인 의지로 정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과 사귀고, 관계를 만드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현재 받고 있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등이 있다.⁶

⁵ WHO-DAS 2.0(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2.0)은 개인의 건강에 관한 생활 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도구로 WHO가 개발했다.

⁶ ASCOT(Adult Social Care Outcome Toolkit)은 영국 켄트대학에서 개발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고 무단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바람의 마을은 일본국립보건의료과학원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사와 평가, 피드백을 운영 중이다.

올해의 경우 6월에 시설장과 주요 조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개요와 필요성,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 이용자와 직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입력 및 확인하며, 8~9월에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 10~11월에 분석과 내용 정리 과정을 거쳐 12월에 피드백 연수를 시행한다. 중요한 단계는 ‘평가 내용에 대해 직원들이 이용자의 돌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케어 플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분석 결과와 연구자들의 피드백 내용에 대해 사업소별로 소장과 직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여 케어 플랜에 반영하는데, 이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받고 있는 시설, 방문 요양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케어러)을 대상으로도 실시하여 총체적으로 그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서비스 현장에서 의도한 대로의 돌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돌봄 계획에 추가한다. 다음 연도에도 같은 항목을 조사하여, 연차별로 결과를 비교해봄으로써 그 변화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갈 수 있다. 올해 초 피드백 연수 시, ‘이용자의 생활을 중심에 놓고 제가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의 상태를 수치화·가시화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여러 명의 직원 사이에서 같은 이용자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다른 때도 있어, 사정이나 지원 계획을 함께 다시 세울 필요를 느꼈다’, ‘평소에는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 들을 수 없는 생각을 이 조사를 계기로 자세히 듣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어떠한 개선 계획과 실천을 통해 결과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추진할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급식에 관련한 개선 사례도 떠오른다. B 시설의 경우 이용자 ASCOT 조사 결과, 식사에 대한 평가가 유독 낮게 나와서 원인에 대해

시설장, 직원들,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이 벌어졌다. 전문 영양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건강을 위해 튀긴 음식의 비율을 줄이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용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를 자주 먹을 수 없게 되자 불만이 쌓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고령인 이용자의 건강’과 그분의 ‘기호, 행복감’이 모두 중요하다고 공감했고, 이용자의 삶의 질(특히 건강 측면)을 고민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알리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예전보다 왜 튀긴 음식이 자주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자주 안내하고, 영양과 관련한 정보 발신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맛있으면서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조리 방법에 대해 영양사, 조리사, 직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식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피드백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 신규 사업은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필요한 당사자가 만들어가는 정신장애인 돌봄

바람의 마을은 빠른 속도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왔다.⁷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 관련한 사례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포괄케어 추진기금(통칭 피어기금)’⁸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⁷ 사업고(매출) 추이를 보면, 2017년 53억 엔, 2018년 59억 엔, 2019년 63억 엔, 2020년 66억 엔 가량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⁸ 자신도 장애나 질병 등의 경험이 있는 당사자가 그 경험을 살려, 대인 지원의 현장에서 장애나 질병이 있는 동료(Peer)를 위해 지원 활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피어 서포트(Peer Support)라고 한다.

2019년 말, 당사자의 부모인 C씨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도 한 명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구어온 정신장애인 그룹홈 사업 전체(토지, 건물 등)의 운영 권리와 잔여 재산 1억 8000만 엔가량을 바람의 마을에 기부했다. 그는 기부금이 정신장애인 운동을 추진하는 단체 조성,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 지원, 정신장애 분야 인재 육성에 사용되었으면 했고, 그 뜻에 따라 운용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로 피어기금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회 대표자, 바람의 마을 직원(정신보건복지사, 간호사 등), 외부 전문가(정신과 의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여러 번의 학습회와 각 위원의 제안 검토 끝에 2021년 7월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 방문간호 스테이션 아리카’⁹를 개설했다. 제도 내의 방문간호는 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리카는 특별히 은둔형 외톨이, 알코올중독자 등 정신장애인 지원에 집중하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 직종의 전문인들이 팀을 이루어 리커버리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ACT¹⁰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치바현의 3대 정신장애인 가족회 대표들의 간절한 주장 때문이었다.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키는 경우는 많지만 지역사회 중심 및 찾아가는 서비스는 보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의 빈틈을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력으로 개선하기 위해 같은 시 안에 있는 바람의 마을 상담지원사업소(코모레비, 스켓

9 ‘아리카(Arica, 在処, ありか)’는 ‘거처, 머물 곳’을 의미하는 일본어이다. 정신장애인의 현재까지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앞으로도 개성을 존중하는 존재를 함께 담구해가겠다는 스텝들의 바람을 담은 이름이다.

10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는 포괄형 지역 생활지원 프로그램이다.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자주 또는 오래 입원했던 사람들의 지역 생활을 지원하는 케이스 매니지먼트이며, ‘지역 생활 중심·회복·감정 중시’라는 세 가지 이념이 중시되고 있다.(田中聡子, 2012)

토)와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상담, 사례 관리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

방문형 지원 사업만으로 정신장애인 문제에 충분히 대응했다고 볼 수 없기에, 현재 피어기금운영위원회는 ‘진료소 만들기 프로젝트’와 ‘안식처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두 가지 부회를 운영하며 신규 사업 및 활동을 검토하고 있다. 40대 아들 두 명 모두 자폐증이 있는 가족회 대표 D씨는, 여러 차례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경찰을 불러 대처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아들들에게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이 나타날 때 신속하게 약을 처방해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에 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진료소 만들기 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당사자 가족들에 대한 욕구 조사, 아웃리치 방식의 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료진에 대해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바라는 의사의 상, 진료소의 모습을 명문화하고 이후 실제적인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안식처 만들기’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E씨가 제안한 프로젝트이다. E씨는 특히 ‘장애인 당사자 사이의 서로 돌봄^{Peer Support}’이 지역에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케다 이사장 등의 위원은 당사자 이외의 지역 주민이나 생협 조합원들도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을 담아 정신장애인과 지역 주민 누구라도 어우러져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식처를 자원 활동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에서 서비스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당사자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검토하며, 그 바람이 구체화하면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여 실제화해내고 있다.

3. 지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장애인,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유니버설 농업

바람의 마을은 11년째 치바현의 사쿠라 시에서 ‘유니버설 농업¹¹ 사쿠라 채소꾸러미’ 사업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채소 생산에는 10년 이상 망에서 나오지 않았던,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던 청년들이 포장과 배달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한다. 생산자들은 다른 직업 생활을 하다가, 사쿠라 시에서 ‘농부’라는 일을 처음 시작한 3040세대들이다.¹² 복지시설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들은 ‘유니버설 농업’이 있어 활동할 거리가 생겼다. 이들은 채소 포장 작업을 마치면 차를 함께 타고 배달을 하면서 이용자들을 만난다. 주요 이용자들은 이 같은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신청한 사쿠라 시의 회사원들, 생협 조합원, 시청 직원, 장애인 부모, 바람의 마을 직원들이다.

이 채소 꾸러미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실무는 생산자, 시청 공무원, 바람의 마을(사무국인 본부, 장애인 사업장), NPO 자원봉사 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유니버설 농업 사쿠라 원탁회의’에서 논의한다. 최근에는 그동안 운영해온 S/M/L 사이즈에 이어 많은 이들이 가깝게 이용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샘플 세트’를 시범 운영해보기로 하고, 그 홍보와 자원 분배 및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샘플 세트를 이용한 고객들이 정기 이용 고객으로

11 유니버설 농업이란, 일반적으로는 원예 작업이나 농업 관련 활동에 의해서 고령자·장애인의 삶의 보람 만들기, 사회 참여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그중 한 생산자 조직은 생활클럽생협과 바람의 마을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무지개와 바람의 농장’이다. 생활클럽연합회에 채소를 공급하던 생산자가 고령이 되어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지역 생협과 바람의 마을이 그 땅을 인수하여 푸드, 에너지, 케어 다방면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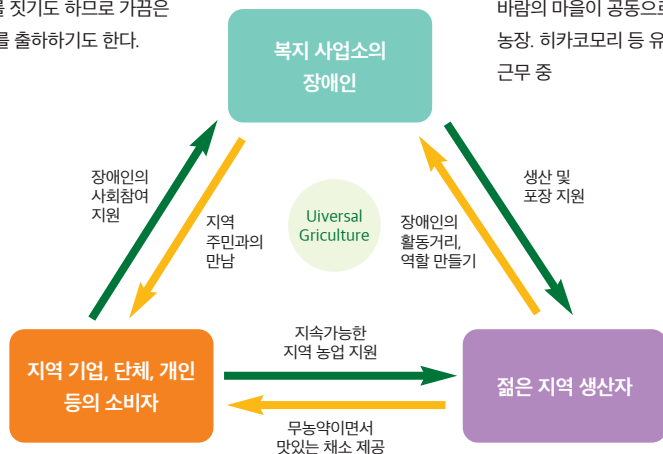
유니버설 농업 사쿠라의 운영 원리

사회복지법인 아이코(메이와)

성인 장애인의 생활 지원을 하는 입주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낮에는 앞마당에서 장애인들이 농사를 짓기도 하므로 가끔은 직접 재배한 채소를 출하하기도 한다.

생활클럽 무지개와 바람의 농장

FEC(Food, Energy, Care) 자급권 만들기과 유니버설 농업 실천을 위해 생활클럽치바와 바람의 마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농장. 히카코모리 등 유니버설 취업자 4명이 근무 중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톤보사)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쿠키 제조 등의 작업 활동을 중심으로 데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의 '포장작업'과 화요일의 '배달' 시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한다.

우리 지역 생산자

치바현 농업대학교를 졸업하고, 2014년부터 사쿠라 시내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짓고 있는 30·40대 생산자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치바현의 토양과 날씨에 적합한 제철채소를 재배한다.

유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기 주문량을 조금 더 늘려서 생산자들에게는 더 많은 출하 기회를, 장애인들에게는 활동 시간을 더 확보하고자 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본부 사무실에 장애인들이 직접 배달을 오는 데,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무실 안까지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채소 꾸러미를 pingce 삼아 일주일에 한 번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이 있기에, 집 근처에 큰 마트가 있어도 채소만은 유니

버섯 농업 꾸러미를 이용하게 된다. 어딘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이용자를 한 명씩 늘리는 일로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만듦과 동시에 우리 동네에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 SDGs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에서 실현해가는 방법

바람의 마을은 직원 주체의 SDGs위원회를 조직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비추어 바람의 마을이 대처해 나갈 과제에 관해 토론하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직위나 계약 상태와 관계없이 함께 고민하고 내용을 만들어보고자 자발적으로 지원한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SDGs위원회 위원들은 서너 명씩 소그룹을 이뤄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 목표를 분담하여 집중 토론하고 학습하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강화해야 할 것, 앞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한 활동 안을 만들고 있다. 도출된 내용은 근간이 되는 의사결정 단위인 경영회의나 이사회에 승인 없이 SDG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실현해 나가게 된다.

또한 올해 당장 실천해볼 수 있는 직원 대상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활동으로는 두 가지의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를 확정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8번째 목표의 내용 중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실현하고자 ‘직종별 온라인 교류회’를 처음 도입해서 지금까지 각 사업소 내에서 주로 소통해온 직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고민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12·13·14번째 목표와 연동해서는 한 명의 직원이 하루에 하나의 페트병을 줄

이는 것을 목표로 ‘마이보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현재 바람의 마을의 이념과 중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재정렬되며, 더욱 집중할 내용들이 새롭게 시도될 예정이다. 현재 내가 속해 있는 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2·3번째 목표인 ‘빈곤·기아·복지’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푸드 팬트리¹³·푸드뱅크·어린이식당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과 여러 단체가 공동의 목적으로 연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취합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킬지를 논의하고 있다.

한편 바람의 마을은 ‘연결된 경제포럼 치바’의 일원이자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연결된 경제’는 ‘사회적연대경제’의 의미를 살려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생활클럽치바생협에서 파생된 단체들이 ‘생활클럽치바그룹’을 이뤄,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하여 지역 포괄케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안심 시스템, 지역의 텃마루 만들기 등 공동 대응을 해왔다. 3년 전 바람의 마을 이케다 토오루^{池田徹} 이사장은 생활클럽생협이 모체가 된 단체들만이 아니라 주식회사, 행정도 함께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치바사회적연대경제회의’를 제안했고, 여기에 참여하는 한 회사 대표가 ‘연결된 경제’라는 표현을 제안하여 연 1회 ‘연결된 경제포럼 치바’를 열고 있다. 그리고 치바 현 안에서 이윤만을 좇지 않고 지역 공생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회사·단체의 대표들이 사회연대경제의 이념에 비추어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강연회와

13 푸드 팬트리(Food pantries)는, 저소득 상황 등을 이유로 식료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품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바람의 생활클럽 치바그룹 안심시스템 활동(지역포괄케어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푸드 팬트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늘었다.

견학 등을 통해 서로 배우고 있다. 최근에는 워커즈코프치바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빈곤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푸드뱅크 활동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후원과 활동 참여를 호소했고, 치바 내 4대 생협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식품을 모으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자원 연계로 이어졌다. 또한 지역 내에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주체가 되어, 전 직원의 직무 중 40퍼센트는 NPO 성격으로 빈곤 아동 학습 지원, 전철역 대청소, 지역 식당 등을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연대경제를 확장해가기 위한 메인이벤트인 ‘연결된 경제포럼’은 올가을에 ‘FECWH^{Food·Energy·Care·Work·House}’를 테마로 하여, 지역 내 조직·회사 구성원의 실천 사례와 생각을 발표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확장하고 더욱 긴밀히 연결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생활클럽치바그룹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내에 확산하고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2019년 ‘치바사회적연대경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를 발행하고,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바람의 마을은 일반적인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커뮤니티 관여에 힘쓰고 있다. 이는 바람의 마을의 두 번째 이념(“우리는, 지역 주민과 함께 누구든 있는 그대로 그 사람답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 만들기에 공헌합니다”)의 실천이기도 하다.

5.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 도태되지 않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전원 참가형 조직 실험이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주거 지원·사회적 양호·유니버설 취업 지원·커뮤니티 디자인 등을 포함해서, 바람의 마을은 제도 내에 없는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제도 내에서도 그 목적을 살려 다종다양한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사업의 영역이 급속도로 확장되어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조직 운영’의 방식을 취해 권역 단위로 책임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힘쓰고 있다. 3~4개 정도의 시 단위로 종합 복지사업의 거점이 위치한 ‘에리어’를 기준으로 치바 현 지역을 8개로 나누고 ‘에리어 매니저’를 세웠다. 에리어 매니저는 각 거점장, 사업소장 등과 협력하여 전 단위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아메바 경영’¹⁴의 축이 된다. 2019년, 전사적으로 아메바 경영이 도입된 후로는 소장 역시 각 사업소 단위로 직원들과 함께 매출과 비용 상황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함께 매진해야 할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 목표를 세워 목표에 대한 달성 상황을 공유하는데, 부진할 시에는 특단의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전원 참가형 조직으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우리 조직이 왜 직원 전원 참가형으로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사회장에 이어 부이사장, 전무이사 단위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속속 업로드하고 있다. 총 5년에 걸쳐 전원 참가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로 올해는 각 단위에서 ‘틸조직’¹⁵에 대한 학습회를 하고, 내년부터는 컨설팅을 도입하며, 3년 후에는 전면적인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14 아메바 경영이란 회사 전체의 조직을 기능별·역할별로 세분화하여 임기응변으로 변화시키고, 각각의 조직이 ‘시간당 채산’이라는 통일된 평가 기준에 의해 부문별로 채산을 요구하며, 전 사원에게 경영자 의식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온 교세라의 독자적인 경영 시스템이다. (KCCS, 2004)

15 틸조직(Teal Organization)은 프레드릭 라루가 주장하는 조직 진화의 다섯 단계 중 최종 모델이다. 실증 연구를 통해 틸조직의 경우, 자기 관리·전체성의 발휘·조직의 존재 목적이라는 세 가지 특징 중 하나 또는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자기 관리는 계층이나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동료와의 관계성 속에 일하는 시스템이다. 전체성이란 본래의 모습으로 직장에서 동료·조직·사회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의 마을 사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경영회의’¹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경영 결정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제안이나 조언을 하는 역할자로 참석한다. 대신 지금까지는 주로 각 지역 거점 현장의 이용자·직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던 ‘각 거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이케다 이사장은 2021년 7월 경영회의에서 바람의 마을 경영의 세대교체를 위해 이 같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전원이 동의했다. 의장으로서 경영회의를 주관하던 이사장도 그 역할을 내려놓고, 앞으로는 거점장 8명이 의장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앞으로가 더욱 궁금하다. 그리고 과연 바람의 마을은 직원의 주체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3년 전 ‘아메바 경영’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을 때, 그 최대의 목적은 ‘전원 참가형 경영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 번째 법인 이념이기도 한 ‘희망과 일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스스로가 참가해 만듭니다’라는 내용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의 마을은 오래전부터 전원 참가형 경영을 목표로 해온 것입니다. 이번에 팀형 조직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바람의 마을 10년 후, 20년 후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¹⁷

¹⁶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부장, 거점장이 구성원이 되어 월 1회 아메바 경영 상황 검토 및 의안 논의를 하는 회의.

¹⁷ 이케다 토오루 이사장이 2021년 직원들에게 발신한 ‘전원 참가형 조직 제1탄’ 중에서.

나가며

지금까지 바람의 마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현재 시점에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했다. 이곳에는 세계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을 연대를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생협이 가꿔온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만든다. 이케다 이사장은 바람의 마을의 역할에 대해, ‘사회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바람의 마을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장 몇십, 몇백 명의 경험으로만 그칠 수 있지만, 작은 경험을 통해 확인한 효과를 모델화하여 정부 정책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후생노동성에 아웃컴 평가를 소개하고 제안하며, 치바현 지사와 함께하는 사회연대경제 포럼을 연다. 또한 바람의 마을의 이념에 공감하여 일하는 직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발표회, 교류회,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세상에 말을 건다.

한편 생협에서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만들기를 훈련해온 조합원 리더들은 치바현 곳곳에서 변주하며 또한 새로운 실험을 해나가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 조직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생기면서 조합원과 직원의 경계도 희미해졌다. 법인격이나 노동 형태를 뛰어넘어, 직원·조합원·지역 주민이 지역 곳곳의 필요에 응답해 참여형으로 만들어가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념으로 연결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부터 만드는 것. 물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겪는 복지 지출의 한계, 돌봄 분야의 인력난, 코로나19 등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언젠가 돌봄이 필요한 인간이기에, 소

외되지 않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그리고 하루 하루 성실히 실천해갈 뿐이다.

[참고문헌]

통계청, 고령인구율 및 합계출산율, 2021.

Donabedian, A., "The Quality of Care : How Can It Be Assessed?", *Jama*, 260(12), 1988, 1743-1748.

KCCS(京セラ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 『京セラア메ーバ経営ゼミナール』配布資料, 第9版, 2004年10月11日.

Laloux, F., *Reinventing Organizations : An Illustrated Invitation to Join the Conversation on Next-Stage Organizations*, Brussels, Nelson Parker, 2016., 嘉村賢州·鈴木立也訳, 『ティール組織 : マネジメントの常識を覆す次世代型組織の出現』, 英治出版, 2018.

池田徹, 『挑戦を続ける生活クラブ風の村』, 中央法規出版, 2015.

小澤祥司, 『生活クラブ千葉グループの挑戦 : 生協がなぜここまでやるのか』, 中央法規出, 2021.

田中聡子, 2012, 「AOT(Assertive Outreach Team : 積極的訪問チーム) 活動報告 : 多職種チームによる包括的な地域生活支援の取り組み」(総合医学会報告 シンポジウム 多職種専門医療としての精神科医療), 『医療』, 国立医療学会, 66(1), 21-23.

Non-GMO 표시 제도의 신기원을 열다

(주)밀크쿵 Non-GMO 표시 시정명령 취소 판결의 의의

조 제 회

조제회법률사무소 변호사,
아이쿵생협연합회 고문변호사



1. Non-GMO 표시 제도의 문제점

식품에 포함된 유전자변형물질(이하 GMO)의 표시 기준에 관하여는 두 가지의 규제가 있다. 하나는 GMO가 포함된 경우에 그 포함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GMO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이른바 Non-GMO 식품)이 Non-GMO임을 표방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식품위생법 등 농식품 관련 법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GMO가 포함된 식품의 표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식약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의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즉, 7가지 품목(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등)의 농식품 군으로 GMO 원재료가 식품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비의도적인 혼입치에 대하여 3퍼센트까지는 인정하고 있고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와 유지류에 대하여는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GMO의 표시 기준과 함께, Non-GMO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정하고 있다. 즉, GMO 표시 대상인 7개 품목의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 중에서 표시 대상 원재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인 경우에 GMO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때만 Non-GMO라는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7개 품목의 표시 대상 식품 외에는 일체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GMO의 표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고시에서 표시 대상 식품 이외에는 일체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은 법령상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2019년에 새롭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제정되어 Non-GMO 표시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일부 옮겨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는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표1로 구체화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외의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제3호 하목에 규정되어 있는데,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의 한 유형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콩, 옥수수, 카놀라 등 7개 표시 대상 품목이 아닌 쌀, 밀, 채소류 등의 농산물, 소·돼지·닭·계란·유제품 등의 축산물, 수산물에는 Non-GMO 등의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Non-GMO 표시를 규제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7개 표시 대상 품목 이외에는 GMO 작물의 재배나 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식품에서 GMO가 검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함에도 그 외의 식품에 Non-GMO 표시를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만적인 홍보라

2019. 10. 28. 이전 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65호)	2019. 10. 28. 이후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6호)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인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는 중대한 허점이 있다. 바로 최종 제품에서의 GMO 포함 가능성 유무만을 기준으로 소비자 기만성을 규정·해석한다는 점이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에 동물에게 급여하는 사료의 주성분은 콩, 옥수수 등으로 GMO 작물이 대규모로 사용된다. 이 경우, 사료에 Non-GMO 원료를 사용했다는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인가, 아닌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밀크쿵 유제품에 대한 Non-GMO 표시 시정명령

아이쿵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쿵생활협)은 2017년 초, 축산물에 대한 조합원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아이쿵생활협에 공급되

는 모든 축종에 Non-GMO를 원칙으로 하는 사료를 개발하여 급여하기로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아이쿱생협을 비롯하여 주요 생협들은 모두 ‘식품 안전’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계층이 조합원으로서 물품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료까지 Non-GMO를 급여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식품 안전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은 물론 동물복지까지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아이쿱생협의 혁신 정책의 일환이었다.

아이쿱생협에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하는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은 아이쿱생협의 정책에 따라서 Non-GMO 콩을 원료로 하는 사료를 급여한 젖소에서 착유한 원유로 유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유제품에 이러한 사실을 적정하게 홍보하기 위해 제품 겉면에 ‘Non-GMO 콩으로 키운’이라는 표시를 했다.

전라남도는 2020년 2월 18일 밀크쿱에 ‘우유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Non-GMO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표시는 식품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이므로 삭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밀크쿱은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 소송의 쟁점

소송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는 간명하여 양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쟁점은 순수하게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표시가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밀크쿱의 기본적인 입장은 표시의 문구 자체가 ‘젖소에게 Non-

GMO 콩 사료를 급여했다’는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우유에 GMO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우유에 GMO가 들어 있다’는 식의 오인·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표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시정명령을 내린 전라남도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은 7개 품목의 표시 대상 품목 외에는 Non-GMO라는 용어 및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우유가 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유제품에 Non-GMO라는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유제품에 Non-GMO라는 문자가 기재된 이상 법령에 정한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했다.

4. 제1심의 판단

2020년 8월 13일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주었다.(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473) 제1심 법원은 GMO 표시에 관한 법규는 GMO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식품에 그 여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이 사건 표시를 볼 때 다른 유제품에는 GMO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밀크쿵의 유제품에는 GMO가 없다는 식의 오인을 줄 가능성이 있고, GMO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GMO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표시 대상 식품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서, 이 사건 표시는 GMO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에 Non-GMO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전라남도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의 가능성을 극도로 협소하게

판단한 것으로, 밀크쿵이나 아이쿵생협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다.

5.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0누11892)에서 밀크쿵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보강했다.

① 이 사건 표시는 법령상 정당하게 Non-GMO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인 ‘콩’과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는 ‘우유’가 결합된 혼합 표시인데, 이러한 혼합 표시는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유제품 자체는 GMO를 포함하지 않지만,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에게는 GMO가 포함된 사료가 급여될 수 있고, 이러한 제품의 ‘생산 과정’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다.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좁은 의미의 품질이나 가격만으로는 적절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정보 전달을 막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기본권(표현의 자유, 알 권리)의 과도한 제한이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도는 기존의 입장에서 주장을 이어갔다.

즉, 법령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니라면 Non-GMO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다는 점, 밀크쿵의 주장과 같이 혼합적 표시를 허용하게 되면 Non-GMO 사료로 키운 축산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Non-GMO 표시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2021년 2월 5일 항소심은 결국 밀크쿵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

결을 취소하고 전라남도의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라남도도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1년 5월 27일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은 특히 소비자 알 권리와 정보 제공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항소심의 논지를 살펴본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목적, 체계, 연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규정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Non-GMO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식품 등에 GMO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는 GMO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이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등에 Non-GMO 라는 표현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취지라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에 Non-GMO 등의 표현을 사용한 모든 경우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으로서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등에 Non-GMO 등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Non-GMO라는 표현을 사용한 모든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등에 Non-GMO 등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등을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오늘날의 소비자는 식품 등의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개성이나 가치관, 신념 등을 드러내고자 한다. 할랄푸드^{Halal food}나 채식주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GMO가 포함된 식품을 소비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식품 등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뿐 아니라, 식품 등이 생산되는 모든 과정 중에 GMO가 사용되었는지와 같은 사정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식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가진다. **식품 등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GMO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Non-GMO 등의 표현을 표시 대상이 아닌 유제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생산자나 판매자의 입장에서 해당 식품 등의 생산 과정에 유전자변형 식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할 방법이 전혀 없다.

③ GMO에 대한 국내외의 규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식품 자체에 GMO가 남아 있지는 않더라도, 그 생산 과정에서 GMO가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그 식품 등의 품질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즉, 이 판결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에 Non-GMO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여 무조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디까지나 그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야 부당한 표시가 된다는 것이다.** 그 판단의 기준은 표시로 인해 ‘소비자가 GMO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을 GMO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가능성’, 즉 해당 식품 등에 GMO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다. 예컨대, 우유 자체에 GMO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표시 자체로서 ‘우유’가 아닌 젖소의 ‘사료’가 Non-GMO라는 의미가 분명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생산자와 판매자의 정당한 정보 제공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법원은 소비자가 소비 행위를 통해 개성이나 가치관, 신념을 표현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식품의 성분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 과정에 관**

한 정보도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라고 보았다. 제1심에서 GMO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GMO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표시 대상 식품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면 충분하리라 판단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이었다. 이는 ‘가치 소비’, ‘윤리적 소비’에 따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생산자 및 판매자의 광고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킨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오인·혼동 유발이라는 측면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현행 식품 표시 제도와 규제 당국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항소심 판결 역시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닌 대상에 직접적으로 Non-GMO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직접적으로 ‘Non-GMO 우유’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될 수 있고, 표시 대상 농산물이 아닌 ‘쌀’이나 ‘밀’에 대해 Non-GMO 표시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GMO 표시 제도 전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생협 zoom in

김성광

작가

flysg2@gmail.com

달팽이 집

돈벌이에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은
먼 이야기가 되는 수상한 시대다.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콘크리트 정글을 떠나
수풀이 우거진 시골로 휴가를 갔다.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까.

제주도 서귀포시 상례동의 한 마을길 모퉁이에서
빗물에 반쯤 잠긴 채 유유히 발걸음을 옮기는
달팽이의 작은 집 한 채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회적 가치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왜 사회적 가치인가

변화의 시기에는 시대적 화두가 있었다. 고도성장기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화두는 ‘잘살아보세’로 대표되는 경제적 가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직선제와 민주화’로 대표되는 정치의 가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대정신이었다. 그러나 성장의 성과가 쌓이고,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지금, 한국인들의 삶은 척박하고 정치적 참여나 효능감은 매우 낮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전환의 양상은 한마디로 ‘풍요와 민주화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높아진 눈높이에 비해 현실은 ‘불만’스럽고, 정치와 제도는 심각한 ‘불신’의 대상이며, 미래를 생각하면 모두가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삼불^{三不}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화두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가치를 높이지 않고는 나라도 기업도 공동체도 개인도 성장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따지기 어려운 ‘품격’이다. 배우자감을 고를 때 외모와 직업 그리고 재산만을 따지고, 정작 인품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조셉 나이^{Joseph Nye}는 한 나라의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나라의 매력과 품격을 ‘소프트파워^{Soft Power}’라고 했다. 아무리 많은 이윤을 남겨도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알미운 기업’으로 인식되며 돌발적 위험에 처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에 끊임없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온 ‘똑똑하고 존경받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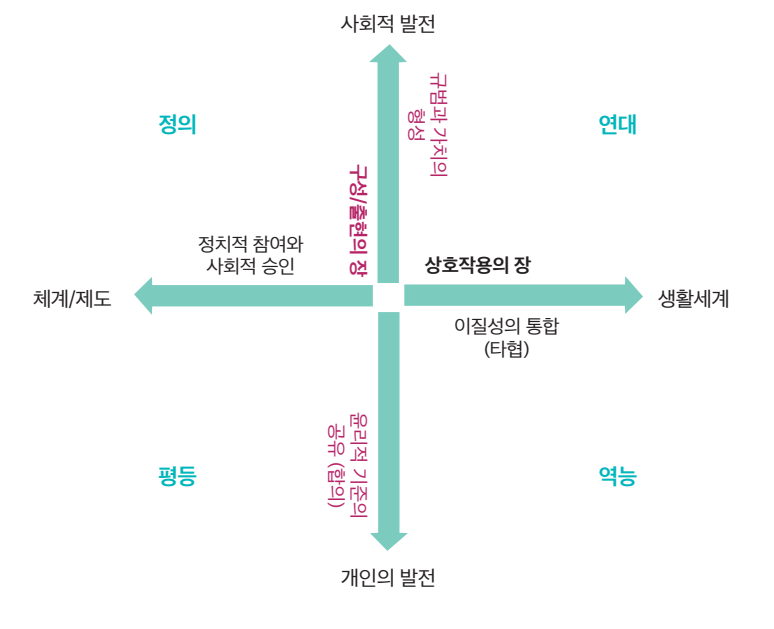
사회적 가치와 사회의 품격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가격은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수치다. 호환성이 높아 누구나 같은 값을 지급한다. 그러나 가치는 내재적이라서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활동에 가격을 매기는 일은 1934년 쿠즈네츠^{Simon Kuznets}가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개념에서 시작됐다.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휩쓸고 지나간 후 시장에서 교환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GDP 개념은 단순했지만 당시엔 효과적 지표였고, 그 이후 지속해서 다듬어졌다.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스톡^{stock}과 플로우^{flow}로 나누어 측정하는 기업 회계도 같은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그동안 ‘경제적 가격’만 측정한 이유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적었고, 이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일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GDP나 재무회계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GDP가 높아도 국민행복감이 정체되는 이른바 ‘이스털린 역설^{Esterlin Paradox}’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UN과 여러 국제기구 그리고 각국 통계청의 노력이 이어졌으며,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열풍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의 품격은 공동체와 개인 간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달리 말하면 미시-거시 연계가 가져다주는 효과다.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는 마을과 조직, 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개인과 공동체 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이다. 즉, 공동체는 개인 간 관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개인 속성의 결합체이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은 공동체의 성원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므로 공동체의 유전자가 각인되며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의 발현



없다. 공동체는 개인의 활력과 자원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창의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가 절대화돼서도 안 되는데, 타인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공동체적 질서를 깨는 극단적 개인주의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간에는 일방적인 압도보다는 상호 긴장의 길항 관계 속에서 역동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은 시스템과 생활세계 간의 관계다. 시스템이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정부 행정, 시장 제도, 위계적 기업 조직 등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 당위적으로 요구되고 예외 없이 집행되는 곳이다. 반면에 생활세계는 생활의 장이다. 서로의 감정을 소통하고, 불만을 이야기하

며, 공감대의 확산을 통해 여론이 만들어지는 진원지다. 사람은 주어진 규칙대로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나름의 역동성을 갖춘 생활세계는 삶을 호흡하는 이들의 터전이다. 그런데 만약 시스템이 생활세계와 완전히 괴리되어 시민 생활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간섭한다면, 삶은 소외되고 무력해진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과도하게 성장한 시스템이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억압 받는 생활세계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저항을 낳고, 심하면 남미 일부 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반면에 제도화되지 않은 생활세계는 무질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사회는 시스템과 생활세계 간에 긴장감 있는 길항 관계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포용하고, 신뢰하며, 활력 넘치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까. 정의와 평등, 개인 자율성과 사회적 유대감 등 서로 길항 관계에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잘 구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넘치되, 각자도생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며 잘 묻치는 곳, 체제의 규율과 일관성이 뚜렷하되 생활세계를 질식시키지 않는 곳, 활력 있는 시민사회의 도전이 체제를 기득권에 안주하지 못하게 긴장시키는 곳이 품격 있는 사회다.

사회적 가치의 구현 방식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때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정부가 가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과 정책 방향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3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고, 현재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따르면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 운영 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아서는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차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가지는 실천적 함의는 어떻게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임기응변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사회적 가치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도 보편적인 개념들을 정책 어젠다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것은 일단 열외로 한다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앞의 그림에서 제시한 두 차원과 지향 가치, 즉 정의, 평등, 역능,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의 네 가지 구성 요인과,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에 달려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의 확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그리고 사회적 역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 가능한가를 의미하며, 사회적 응집성은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를, 사회적 역능성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 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얼마나 복돋워지는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지표들을 종합하면 공동체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척도로서 사회의 품격을 지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가치가 잘 구현되는 사회는 사회의 품격이 높은 사회

인데, 위험한 ‘불안사회’보다는 안전한 ‘안심사회’를, ‘불신사회’가 아닌 ‘신뢰사회’를, ‘배제사회’가 아닌 ‘포용사회’를, 그리고 ‘무기력사회’가 아닌 ‘활력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삶의 기본 토대가 되는 조건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인간적 삶을 위한 물질적·환경적 자원을 제대로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빈곤, 질병과 재해, 실업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 욕구들이 충족되는 사회가 ‘안전사회’라면, 그렇지 못한 사회를 우리는 ‘위험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객관적 차원의 ‘안전과 위험’은 주관적 차원에서는 ‘안심과 불안’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에 치명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둘째, 사회적 응집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보여준다. 사회적 연대감은 일반적 신뢰, 제도나 기관에 대한 신뢰, 이타심, 시민적 참여, 다원주의와 관용성 등의 수준에 의해 측정된다. 사회적 연대감이 잘 유지되고 서로 신뢰하며 규칙이 투명해서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사회적 응집력이 유지되는 사회를 ‘신뢰사회’라 한다면,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사회적 규범의 일관성과 포괄성이 없고 집단 간 이기적 경쟁만 존재하는 해체된 사회를 ‘불신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특수한 연고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넘어서는 보편적 신뢰, 사회 규칙의 보편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대 등이 일자리 배분이나 과세를 둘러싼 형평성과 세대 간 분배의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나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즉, 사회 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나 신념과 무관하게 그가 사회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제도나 기회 구조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이러한 ‘포용사회’에 대비되는 것은 ‘배제사회’다. 포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에 대한 가입률, 남녀 간 임금 격차나 공직 진출의 차이, 노동시장 내 장기 실업자 비율, 비자발적으로 차별받은 비정규직의 비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역능성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짜여 있는가를 보는 지표다. 시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적인 사안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정치적 의무에 따르는 권리라는 형식적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이 투표 참여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각종 투표율과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 정도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 기제의 존재 유무,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의 포괄성, 사회보장 및 복지 예산의 규모, 정신병 유병률이나 자살률 등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능력 발휘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활력사회’라 한다면, 그 반대를 ‘무기력사회’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과 과제

사회적 가치를 구체화한 사회적경제 역시 기업이나 시민사회뿐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역사적 발전 경로를 살펴보면, 경제권력, 국가권력, 사회권력 등 세 권력 자원 간의 상호 관계

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체제로 발전해왔다. 대체로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이나 시민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영미형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진화한 반면, 시민사회 역능화를 통해 국가 권력이 사회권력의 통제하에 놓이면서 경제권력을 조정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계급 타협을 통한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진화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강력한 국가권력에 의해 경제권력과 시민사회가 순치되곤 했기에,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는 방식도 시민사회의 권력이 강했던 유럽형이나 기업의 영향력이 강했던 영미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사회 전반의 규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많은 이들의 선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정책에 의해 육성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대안성은 약한 반면, 정부의 인증을 거치면서 동형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규범적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나 자율성이 아직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적 혁신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와 제도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방법을 고민하여 현실 적합성이 높은 제도와 지원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대체로 사회적 가치는 외부성의 효과나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가격 기구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려면,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효과까지 포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편의성이나 수단적 효율성 이외에도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사회적 가치를 정부 혁신의 가장 큰 핵심 과제로 내걸었지만, 정작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당황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평가의 프레임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를 지원한다고 할 때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보통 자활기업에서 출발하여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지, 특히 취약계층을 얼마나 고용하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고, 그 성과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법률 체계가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제한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모든 지원이 취약계층에만 모이고, 만 3년이 지난 후 절반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문을 닫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셋째,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은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는 조직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어떤 평가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1) 평가하고자 하는 조직이 신생 조직인지, 어느 정도 중요성과를 거두고 있는 안정된 조직인지, (2) 평가하고자 하는 조직의 성과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경제적 지표가 있는지, 또는 주관적이며 포괄적인 사회적 지표인지, (3) 평가하고자 하는 조직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지, 또는 국가, 사회, 전 지구적 차

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생활세계와 시민사회, 종교기관, 교육기관, 연구 집단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 평가와 구현의 문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고, 시민 참여가 활발한 사회에서 타당성이 높은 실질적 평가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례에 들어맞는 하나의 모범 답안은 없다. 그러나 평가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일 자체가 매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이다. 앞으로 다양한 평가 사례들이 누적될 때 풍부한 평가의 생태계도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규범과 가치가 시장을 순차해온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고동현·이재열·문명선·한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 한울아카데미, 2016.
박명규·이재열 엮음,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한울아카데미, 2018.

사회와 연대하며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아이쿱생협

김선화·신호진, 《윤리적 소비에서 공정무역마을운동으로 : 아이쿱 이야기》, 쿼드림, 2021.

천 경 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혁신융복합전공
부교수



2010년 3월 가톨릭대학교에 ‘소비윤리’ 교과목을 개설할 때까지만 해도 윤리적 소비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윤리적 소비라는 용어를 낯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재로 쓸 책의 제목도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로 출간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윤리적 소비는 가치 소비 또는 의식 있는 소비 등으로 이해되며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의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두가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소비해야 하는지 염려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견한 듯 아이쿱생협에서

는 1997년 출범하면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공급에 관심을 두고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했다. 2008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윤리적 소비를 활동의 정체성으로 선언하고, 2007년부터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며 지구적인 연대와 협력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아이쿱생협이 실천해온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 활동 내용이 《윤리적 소비에서 공정무역마을운동으로 : 아이쿱 이야기》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아이쿱생협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김선화·신효진 박사가 함께 저술해서 더욱 의미가 있고, 내용도 충실하게 기술되었다.

아이쿱생협은 올해로 23주년을 맞아 성년으로 성장했다. 2008년 1월 정기총회에서 ‘아이쿱생협은 윤리적 소비입니다’라는 정체성 선언 이후,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정무역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책에서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쿱생협이 지향하고 실천하고 있는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의 지난 13년 동안의 활동 보고서인 이 책은 지니는 의미와 의의를 몇 가지 제시해본다.

첫째, 이 책은 아이쿱생협이 그동안 어떠한 비전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는지 아이쿱생협 활동의 역사와 연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이 출범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심 내용과 이후 변화한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아이쿱생협에서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인식하고 깨닫게 한다. 아이쿱생협의 기록 자료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한 의미 있는 교육 자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책은 아이쿱생협이 지향하는 윤리적 소비와 그것을 실천하는 공정무역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란 ‘내가 지불한 대가가 그 물품을 생산한 노동자,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당하

게 보상한 것인가’ 그리고 ‘물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이 물품과 에너지의 순환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제3세계 농민들에게 적절한 수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을 도우며, 윤리적 소비 행위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공정무역은 아이쿱생협의 윤리적 소비라는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활동이며, 공정무역 물품은 아이쿱생협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소비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의 ‘연결’임을 깨닫고 독자들이 소비 행태를 바꿈으로써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책은 아이쿱생협이 지난 13년 동안 이끌어온 공정무역 활동을 풍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우리나라의 공정무역 활동의 시작과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까지 조망한다.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적립하는 국제공정무역기금과 공동체발전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공정무역 인증 절차와 국제공정무역기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독자들은 공정무역이 전 지구적인 활동이며 신뢰할 만한 인증 과정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체계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무역기금과 공동체발전기금으로 지구촌 여러 지역 주민의 삶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공정무역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와 공정무역운동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책은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아이쿱생협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사업의 실제 사례와 변화된 소비자 생산자의 삶을 소개함으로써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공감을 일으킨

다. 필리핀의 마스코바도 제조공장 사례, 페루의 생산자단체 사례, 코스타리카의 커피 생산자단체 사례 등을 소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조합원들의 경험과 소감에 대한 인터뷰를 소개함으로써 아이쿱생협이 어떠한 활동을 해왔으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보게 하고 있다. 책을 통해 조합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비조합원들은 아이쿱생협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책은 아이쿱생협이 그동안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을 실천하면서 제3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 내용, 즉 공정무역 물품 교역 현황, 공정무역 교육 참여자 수, 공정무역 교육 내용별 진행 횟수, 공정무역 교육 참여자 현황, 공정무역 교육 사업비 현황 등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공정무역 품목 확대, 공정무역 주류화를 위한 시도, 생산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 방식, 공정무역의 확산을 위한 교육 등 아이쿱생협이 지난 13년 동안 이어온 활동과 지역을 공정무역마을로 지정하여 공정무역 소비를 확산하려는 운동의 실천 내용이 통계 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로써 공정무역이 하나의 사업이라는 인식을 넘어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쿱생협의 13년 활동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을 위한 윤리적 소비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공정무역의 발전 과정 그리고 공정무역 활동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더욱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제3섹터를 해매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자크 드푸르니·마르뜨 니센 외, 《사회연대경제 : 1 토대》, 김신양·엄형식 옮김, 착한책가게, 2021.

주 세 운

《생협평론》편집위원



텅 빈 사회적경제라는 지시어

협동조합에서 일한 지 만 10년이 되어가지만, 항상 나는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궁금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에 관한 여러 논설을 접할 때마다 ‘자본주의 대안’이자 ‘지속가능한 경제모델’ 등 온갖 미사여구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사회적경제란 무엇인지, 이 개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답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협동조합 역사에 곁들여 설명하거나, 사회적경제의 주요 조직 형태인 협동조합, 공제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소개에 그칠 뿐이었다. 결국, 사회적경제란 용어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유사한 법인격들을 통칭하는, 그 자체로는 텅 빈 지시어에 불과할 뿐인 걸까.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의 고유한 맥락과 역사는 부재한 것

인가.

이번에 노동자협동조합 출판사 ‘착한책가게’에서 나온 《사회연대경제》는 이러한 나의 무지와 오해를 해소해주는 의미 있는 책이었다. 물론 처음 목차를 펼쳤을 때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결사체, 자원활동, 연대경제, 사회적기업 등으로 이어지는 소제목에서 교과서적인 진부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책이 지닌 장점은 그러한 겉보기 구성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어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맥락이 가진 역동성과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교과서(?)라는 점이다.

재발견되고 변화해온 개념, 사회적경제

가령 첫 번째 장인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지난 200년간 끊임 없이 발전해온 듯한 사회적경제가 실제로는 불과 반세기 전인 1970년대 일단의 협동조합 행사에서 재발견되어 쓰이기 시작한 개념임을 설명한다. “1977년에 개최된 포럼에서 협동조합 사회학자 앙리 데로쉬는 문혀 있던 지드의 보고서를 꺼내어 이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을 사회적경제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49쪽) 물론 그것은 단지 사회적경제 개념의 현대적 출발이었고, “2014년까지 모든 이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다”(51쪽). 사회적경제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프랑스어권 연구자들의 저작답게, 이 책은 사회적경제의 역사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독자들에게는 약간 의아할 수 있는 3장 결사체와 4장 자원활동 부분도 마찬가지다. 1977년 프랑스에서 재호명된 사회적경제의 구성원은 ‘(기업적) 경영결사체’인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일부 결사체 등

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책에서 문듯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그린피스와 같은 결사체가 (...) 덜 경제적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들 조직의 임금노동자 및 자원봉사자 수, 그리고 개인과 집단에 제공하는 서비스 등 전체를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에 이른다”(50쪽). 결국 경제에 대한 관점은 계속 확장되어 결사체와 재단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경제의 외연은 넓어졌다. 단 불어권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쓰인 책이니만큼, 3장 결사체 부분의 내용이 개념에 대한 일반론보다 영미식 제3섹터 개념에 대한 반론에 치우친 감이 있어, 그 논설에 대한 공감은 차치하고서라도 일정 부분 가독성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역사가 사회적경제를 사회운동에서 분리했다면, 연대경제의 관점은 자신의 정치적 차원을 통해 사회운동과 새로운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315쪽) 5장 연대경제 부분은 이 책의 또 다른 백미이다. 그간 일종의 수사 혹은 사회적경제의 유사 표현 정도로 이해해왔던 연대경제가 실은 독자적인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음을 사회적경제와의 대비 속에서 보여준다. 1990년대 프랑스에 등장한 연대경제는 ‘구사회적경제’와 대비되는 ‘신사회적경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존 사회적경제의 물질치성, 제도화된 경직성 등을 비판하며 등장한 새로운 운동이었다. “연대경제는 근린서비스, 공정무역, 윤리금융, 유기농업, 저숙련자의 자활 지원, 생태적인 쓰레기 처리 등의 영역에서 사회혁신과 오늘날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다.”(76쪽) 이러한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 사이

의 긴장과 교류는 사회연대경제라는 통합된 개념으로 수렴해서, 결국 2014년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이쯤에서 독자들은 눈치챌 수 있다. 이 책의 목차 자체가 프랑스의 사회적경제가 변화하고 확장해온 과정이라는 것을.

덧붙여 프랑스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논의되어온 흐름은, 이 땅의 독자들에게도 기시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듯싶다. 해방 직후 등장한 신탁과 농협 같은 제도화된 개별법 협동조합에 비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생협과 의료·돌봄 협동조합, 공정무역 등은 더 정치적이고, 조합원 참여를 보다 강조했다. 이러한 신규 간의 긴장과 활력은 한국적 맥락의 사회연대경제 운동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이 마지막으로 다루는 사회적기업은 가장 뒤늦게 등장한 사회적경제 주체이다. 이 책은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맥락이 유럽과 영미권에서 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 통합과 결사체를 강조한 유럽과 달리 영미권의 사회적기업은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 책은 특히 두 가지 차이를 중점적으로 상술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이윤 분배와 의사결정 과정 문제이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 벨기에의 사회적목적회사 등 유럽의 주요한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는 협동조합 방식의 이윤 분배 제한과 1인 1표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수단을 요구한다. 하지만 주로 재단과 민간 영리기업 영역에서 자원을 동원하는 영미권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제한이 부재한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이에 비교하면 어떨까. 일정 부분 이윤 분배는 규제하지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요구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인 듯하다.

사회적경제는 하나가 아니다

“이 책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일반이론의 수립과 같은 야심 찬 목표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자. 오히려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점과 여전히 불분명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26쪽)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성의 드러냄은 결코 난잡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경제와 제3섹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등 유사해 보이는 개념들이 가진 각각의 맥락과 쟁점을 충분히 짚어준다.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감마저 들었던 프랑스식 관점의 강조 또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일반론으로 포장하지 않고, 저자들의 관점마저 상대화해 보여준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자신만의 렌즈를 갖는 데 충실한 지침서가 될 만하다.

이 주 회

세이프넷지원센터 국제팀

스페인, 폴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스웨덴의 6개 농업 부문 협동조합이 유럽 농업협동조합 네트워크인 Cogeca에서 수여하는 ‘유럽협동조합혁신상’^{European Award for Cooperative Innovation}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이 상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동에서 협동조합의 혁신과 성과를 기리기 위해 Cogeca가 주최하고 스페인 협동조합은행인 Cajamar Caja Rural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Cogeca는 700만 명의 생산자가 속한 2만 2000개의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며, 이들 협동조합은 6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유럽협동조합혁신상에 100개 이상의 농업·임업 협동조합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제출했으며, Cogeca에 따르면 제출된 프로젝트의 높은 수준과 양이 유럽의 그린딜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협동조합이 모든 영역에서 농업 전환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상자 중 스페인의 Mans 협동조합은 취약계층, 특히 청년들을 위한 활동으로 사회적가치상을 받았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생산자들을 지원하면서 공정한 가격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유기농 농장에서는 지적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소외 계층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금까지 총 125명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했다. 벨기에 농산물협동조합연합은 데이터 수집 및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다기능 플랫폼인 Care4Growing 프로젝트로 수상했는데, 생산자들은 효율적인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으며 지식을 공유하는 등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의 Okregowa 협동조합은 업그레이드된 유청 단백질 상품으로 수상했으며, 아일랜드 육류 가공 협동조합인 Glanbia는 공급망 전체에 장기적인 경제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인 통합 생산 모델인 Twenty20 Beef Club 프로젝트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추적 가능하고 단축된 공급망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소고기 공급을 지원한다.

스페인의 Camara Arrosera 협동조합은 왕겨로 만든 플라스틱 대체품인 ORYZITE 프로젝트로 생물경제학 및 순환성 상을 받았다. 이 신소재는 10년 이상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순환경제와 쌀 부산물의 가치를 재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27년에 설립한 이 농업협동조합에는 2500명의 조합원이 델타 델 에브로 삼각주 지역에서 쌀을 생산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고 폐기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들이 생산 후 가져오는 왕겨로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일부를 대체하여 자동차, 포장지,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열가소성 수지에 왕겨 대체물을 최대 60퍼센트 이상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은 생산물을 이 대체 플라스틱으로 포장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 85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Lantmannen 협동조합은 ThermoSeed 프로젝

트로 천연자원 및 생물 다양성 상을 받았다. ThermoSeed 프로젝트는 농업 분야에서 살충제의 필요성을 줄이고 환경에 도움이 되며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종자 매개 감염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증기 살균으로 종자를 처리하는 프로젝트이다. Lantmannen 협동조합은 1만 9000명의 생산자로 이루어진 농업협동조합으로 매년 5만 톤 이상의 종자가 처리되고 있다.

이번 유럽협동조합혁신상을 계기로 Cogeca의 라몬 아르멘골^{Ramon Armengol} 회장은 Cogeca와 협동조합들이 유럽 그린딜의 틀에서 많은 이니셔티브에 노력하면서 이미 먹거리 시스템과 임업 부문을 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Cogeca는 지난해 EU 그린위크(10월 19일 주간)를 맞이하여, ICA 유럽에서 기획한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을 녹색 전환의 핵심 파트너로 고려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협동조합의 기여를 알리기 위해 ‘17 Reasons to Coop’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중에는 나무 재배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아일랜드 Carbery 협동조합,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 핀란드 Valio 낙농협동조합, 폐기물을 활용하는 그리스 PINDOS Ioannina 가금류 농업협동조합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유럽의회에서 203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퍼센트까지 줄이기로 투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회원국이 달성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EU 기후변화위원회^{ECCE}를 설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Cogeca는 탄소 크레딧 제도 지원과 함께 농지의 탄소 격리 능력과 시장 기반 접근을 통해 농업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의회의 내용에 찬성하기도 했다. 이 네트워크는 EU의 농업 분야가 1990년 이후 전체 생산성을 25퍼센트 증가시킨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20퍼센트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자들이 현재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과 강력한 정치적 지원, 금융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문헌]

Copa Cogeca 보도자료 (<https://copa-cogeca.eu>)
Mans cooperative (www.mans.coop)
Care4Growing 프로젝트 (www.care4growing.be)
Twenty20Beef Club 프로젝트 (www.kepak.com/farming/twenty20)
ORYZITE 프로젝트 (www.oryzite.com/en/home/)
Camara Arrossera 협동조합 (<https://www.lacamara.es/en/la-camara>)
ThermoSeed 프로젝트 (www.thermoseed.se/)
Lantmannen 협동조합 (www.lantmannen.com/)
COOP NEWS thenews.coop

협동조합의 더 깊은 정체성과 협동조합 생태계 구상

내년 2022년이면 국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된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협동조합의 더 깊은 정체성’을 주제로 아시아, 그것도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개최된다. 참으로 절묘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새로운 협동조합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이 또 있을까?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분위기가 싸하다. 현장의 협동조합 관련 조직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커녕 협동조합의 ‘정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자조와 체념, 냉소적인 말들이 오간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년과 협동조합의 정체성

국내 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로 현재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전국 약 2만여 개, 서울 약 4500여 개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실질 운영률이 약 5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는 기재부의 실태조사 결과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요즘 흔히 대두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다.

사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본 취지는 협동조합을 더욱 자유롭게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양적으로 팽창되어 명멸하는 협동조합 수만 놓고 협동조합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양적 팽창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유의미한 협동조합의 사례와 모델이 등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이른바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가능성 문제’다.

정리하면 핵심은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문제’다. 기재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양적 팽창의 시기를 ‘COOP 1.0 시대’라 규정하고, 다가올 질적 성장의 시기를 준비하며 ‘COOP 2.0 시대’라 선언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내가 만난 그 누구도 이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매우 많은 협동조합인들이 이를 비판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본법 협동조합은 지

속 가능하지도 질적으로 성장 가능하지도 않다고 잠정적으로 판단 내리고 있는 듯하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정체성의 위기’가 아닐까 한다.

협동조합 생태계 구상과 협동조합의 자생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초기부터 ‘협동조합들의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 등장한 대표적인 개념이 있다. 바로 ‘협동조합 생태계 구상’이다. 개별 협동조합들은 척박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려 하는 씨앗과 유사하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생태적 토대 및 토양의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는 매우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론이 우세한 것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일정한 오류와 한계를 드러낸 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짧은 지면의 한계 상 협동조합 생태계 구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논의를 개념적으로 단순화해서 보고자 한다. 협동조합 생태계는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① 주체 영역, ② 정책/제도 여건, ③ 시장 여건, ④ 사회적 여건이 그것이다. 해당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로 안정화될 때 비로소 협동조합 생태계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① 주체 영역이다. 나머지 ②~④ 요소는 외부 여건에 해당하므로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의 성패는 주체인 협동조합들이 싹을 틔우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주체 영역을 강화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주체 영역이 자생적으로 강화되거나, 주체 영역을 제외한 외부 요소가 주체 영역의 자생적 강화에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체 영역의 성장은 크게 비사업연합 방식과 사업연합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을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의 활동이 과연 주체 영역의 강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협동조합 진영이 주로 구사해온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체 영역’을 단체적 방식으로 조직하고 대표성을 확보한 후 주체가 수행할 수 있는 비사업연합 방식 중 정책 개발, 정책 협상 기능에 집중한다. 그다음 민관 협력을 통해 외부 여건 중 특히 ‘정책/제도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으나, 주체 영역 당사자 조직들의 자생력 약화와 공공 지원 의존 심화라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공 지원은 그 태생적 성격상 지속 가능한 지원이 아닌 한시적, 제한적, 시혜적 지원에 불과하므로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포함된다.

사업연합을 통한 협동조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현재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전략에서는 어떤 방법, 어떤 방식으로든 주체 영역이 유의미하게 강화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당사자 주체 영역의 자생적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본인이 속한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서는 현재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 중이다. 아직 조사연구 단계에 불과할 따름이지만, 지금까지의 잠정 결론으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시도되지 않은 '당사자 조직들의 사업연합 방식을 통한 협동조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주체 영역의 자생적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할애된 지면상 자세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지나온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해 더욱 풍부한 논의가 부디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 {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

창간 특집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김형미(메이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 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
생협평론 2011 봄(2호)
● {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

특집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허헌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쿵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신성식(아이쿵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 {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

특집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정찬율(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김영숙, 이금자, 이필규,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 {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

특집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장원봉(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오향식(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박제선(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생협평론 2012 봄(6호)

{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

특집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題)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생협평론 2012 여름(7호)



{ 세계의 협동조합 }

특집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특별기고]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로저 리차드슨(R.C.Richardson,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좌담]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익, 조성돈,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가을(8호)



{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

특집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의 만남

—신효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겨울(9호)



{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

특집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맹신협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좌담]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영, 조항숙, 김아영



생협평론 2013 봄(10호)



{ 협동조합 생태계 }

특집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아이쿱생협 콕서비스 경영이사)

[좌담]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생협평론 2013 여름(11호)



**{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특집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항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좌담]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생협평론 2013 가을(12호)



{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특집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좌담]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

특집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튼튼해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쿱생산업인 경영대표)

[좌담]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생협평론 2014 봄(14호)



{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

특집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좌담]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생협평론 2014 여름(15호)



{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

특집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좌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생협평론 2014 가을(16호)



{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

특집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좌담]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 생협평론 2014 겨울(17호)

● {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

특집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윤주일(쿠팡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강민수(굽비즈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좌담]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제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 생협평론 2015 봄(18호)

● {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좌담]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 { 청년과 협동조합 }

특집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룡(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좌담]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희,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 {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

특집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마을과 경제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레자연드림파크 사례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좌담]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 {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

특집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좌담]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박란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 생협평론 2016 봄(22호)

● {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

특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박성재(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좌담]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장민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선, 유재홍



생협평론 2016 여름(23호)



{ 협동조합과 혁신 }

특집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김활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좌담]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김대훈, 김아영, 김홍길, 서종식, 정경섭



생협평론 2016 가을(24호)



{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

특집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천(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좌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김현, 박승룡, 이우용, 박찬선, 강민수

● 생협평론 2016 겨울(25호)

● {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

특집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좌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김미선, 김종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 생협평론 2017 봄(26호)

● { 불안의 시대,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

특집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길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는 가능한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의 고용 실태와 과제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미’있는 일하기,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가요?

—제현주(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조합원)

[좌담]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김선경, 마성균, 백희원, 서종식, 최혁진

● 생협평론 2017 여름(27호)

● {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

특집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좌담]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김대훈, 김영배, 김인선, 송경용, 서형수

● 생협평론 2017 가을(28호)

● {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

특집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탐구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상생 : 캐나다 퀘벡의 사례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따로 또 같이

—박경숙(순천광장신문 시민기자), 이종관(순천광장신문 편집장)

평화시장의 모범업체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좌담]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

—박강태, 이희수, 조준호, 한석호, 송경용

● 생협평론 2017 겨울(29호)

●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김종걸(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곽형모(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투명하나 충분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이순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자치국장)

[좌담]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김기민, 김수화, 민선영, 박준구, 손홍택, 박범용

● 생협평론 2018 봄(30호)

● {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특집 문재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

—편용우(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

—임남희(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힐링센터0416심과함 사무국장)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박선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

—김현대(한겨레 기자)

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생협평론 2018 여름(31호)



{ 순환과 회복의 경제 }

특집

쓰레기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지구 환경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생의 관계 맺기

—윤숙희(가치가지살롱협동조합 이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살림의 실천

—유현실(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김경하(더나은미래 부편집장)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기

—강양구(지식큐레이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한걸음 : 시민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김성경, 김신범, 오창길, 윤성미, 이경재, 김형미



생협평론 2018 가을(32호)



{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

특집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뜯어보기

—서종식(의협협동노동센터 소장)

결사체 운동으로서 주민운동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김성훈(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 사회적경제 대전플랜 상임대표)

현장 기반 학습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사회적경제 연구자 육성 현황과 전략

—장승권(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

한살림과 한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7가지 방법

—서동재(한살림연합 인사지원팀)

같이 성장하고, 가치를 성장시키는 협동조합 사람들

—김아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좌담]

5인 5색, 사회적경제 인재를 말하다

—김하나, 신철호, 신현상, 원종호, 정찬필, 박범용



생협평론 2018 겨울(33호)



{ 사회적경제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

특집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

—김병권(서울시 협치자문관)

공동체는 지역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임경수(전주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아이쿱 모임,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가다

—박미정(아이쿱활동연합회 자치활동국장)

청년과 공동체 삶의 가능성

—박희정(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디지털 커먼즈의 위상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좌담]

느슨한 연대로 만드는 현대의 공간

—박동광, 송건, 유한밀, 조완석, 조금득, 장인권

●

생협평론 2019 봄(34호)

●

{ 사회적경제와 세대교체 }

특집

[좌담] 세대 갈등을 넘어서는 세대교체, 이렇게 생각한다

—강성균, 우윤식, 윤하나, 오윤덕, 황명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 리더로 활동하기

—김진아(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농협 세대교체의 현 주소와 농민 협동조합의 미래

—이상길(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농정전문기자)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한 아이쿱 리더십의 과제

—김현숙(사천아이쿱 이사장), 정설경(동작서초아이쿱 조합원)

생협의 세대교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위성남(전 마포시민협력플랫폼 대표, 전 성미산마을 대표)

●

생협평론 2019 여름(35호)

●

{ 사회적경제의 지형과 전략 }

특집

[좌담] 사회적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성기, 김영식, 안미현, 정원각, 김찬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김기태((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그 후 6년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前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경남의 사회적경제, 그 발자취와 활성화 전략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김보라(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황명연(한국자활연수원 주임)

● 생협평론 2019 가을(36호)

● { 사회적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특집 [좌담]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

—강봉심, 지민진, 박기범, 변준재, 주세운

몸무게 재듯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자

—도현명(임팩트스퀘어 대표)

사회적가치지표(SVI)의 성과와 과제

—강경홍(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장)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

: ‘사회적 회계와 감사(Social Accounting & Audit)’를 중심으로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역량강화센터 소장)

퀘백 사회투자 네트워크(RISQ)의 ‘사회적경제 조직 평가 가이드’ 소개

—김진환(C.I.T.I.E.S 연구원)

● 생협평론 2019 겨울(37호)

● { 민관 협력과 중간지원조직 }

특집 [좌담] 사회적경제 당사자로서의 중간지원조직

—정영화, 조인숙, 이원표, 안준상, 황명연

지원이란 무엇인가?

—김찬호(《생협평론》 편집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

한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생존 조건 : 경쟁 격화와 전문화/지역화의 요구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지역에서 경험한 중간지원조직 민관 협력의 현실

—윤도현(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전 동작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 사무국장)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 인재를 키우는 산실이 되기 위한 과제

: 일자리로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찰

—최용완(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시민 주체 ‘새로운 공공’을 위한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실천

: 당사자 조직의 중간지원조직 기능, ‘협동노동’의 플랫폼 만들기

—타시마 야스토시(田嶋康利,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
옮긴이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생협평론 2020 봄(38호)



{ 사회적경제 법, 제도의 쟁점과 과제 }

특집

[좌담]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 현장을 돌아보다

—강민수, 박향희, 이경호, 이현민, 김대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강민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생협법 개정이 이 시대에 던지는 5가지 화두

: 협동조합의 상호성 원칙을 전면 제기하며

—박범용(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그 의미

—이선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변화 :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박철훈(지역과소셜비즈 연구지원실장)

2020년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꿈꾸다

—방태형((사)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

사회적금융 관련 법 · 제도의 점검

—장지연(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도시재생은 사회적경제를 담는 그릇?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생협평론 2020 여름(39호)



{ 재난의 시대,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

특집

[좌담] 코로나19에 비친 사회적경제

—길현중, 변형석, 안인숙, 정태인, 김찬호

코로나19를 이겨낼 소중한 치료제,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격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

—주태규(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이사장)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의 대응 :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경((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지역과 국가의 경계 없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신재민(해외정보분석연구 협동조합)

재난 속 생활 방역 그리고 돌봄 노동자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감염병 재난, 생활공동체로 살아남기

—정미정(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에이팏코리아) 이사장)

● 생협평론 2020 가을(40호)

● { 생협평론 10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

특집 [독자 집담회] 더 나은 세상을 잇는 무지갯빛 징검다리

—김성미, 김이, 이선영, 정설경, 김찬호

<특집 I> 생협평론과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생협평론, 협동조합 담론 활성화의 주역

—염찬희(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미디어 지형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로 그린뉴딜 하기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비대면 사회와 사회적경제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 10년 후, 2030년 우리의 모습

—김형미(상지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특집 II> 사람책, 사회적경제 일꾼들의 삶과 생각

사회적 금융이 왜 활성화되지 못하냐면요

: (주)비플러스 박기범 대표

—주세운(생협평론 편집위원)

마음의 소리를 따라 걸어온 10년

: HBM사회적협동조합 MTA코리아 이예나 팀코치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시련도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청춘의 힘

: (주)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김태경 대표

—박범용(SAPNet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생협평론 2020 겨울(41호)



{ 기후위기와 사회적경제 }

특집

[좌담] 생태적 회복을 위한 큰 그림, 그리고 작은 실천

—김현주, 송정화, 이상헌, 차유미, 김찬호

생태적 전환의 근본 방책 : '자력 경제' 넓히기

—이일영(한신대학교 경제학 교수)

지구 살리기,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때

—이진백(<라이프인> 편집장)

제로웨이스트(zero-waste)가 대체 뭐야

—김아리(제로웨이스트샵 지구 대표)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와 강조되는 환경 지표

—이주희(SAPENet지원센터 국제팀장)

주민이 만들어가는 에너지자립마을

—김소영(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



생협평론 2021 봄(42호)



{ 커뮤니티케어와 민관 협치 }

특집

[좌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고은주, 이승언, 정두영, 조금득, 최은주

커뮤니티케어와 민관 협력

—임종한(한국커뮤니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커뮤니티케어와 주체의 역할

—김연아(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사협의 역할

—경창수(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신사회서비스로서 가사서비스 활성화 방안

—최영미((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아동 돌봄 영역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고찰

—성태숙(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제언 :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엄선덕(파파스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생협평론 2021 여름(43호)

● {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

특집 [좌담] 현장에서 경험한 사회적경제

—서지애, 신형석, 장하은, 최솔비, 김찬호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

: 시대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김종걸(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한국 사회적경제의 발자취

—신명호(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한신대학교 초빙교수)

사회적경제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 한국 사회적경제 정체성 선언을 위한 제언

—강민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김정원(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계약교수)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디지털 포용을 중심으로

—김성기(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단행본]

-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일본 21세기코프연구센터 저 | 한국생협연합회 역
- 2 2008 《iCOOP생협 10년사 : 협동, 생활의 윤리》
 ___iCOOP생협연대 저
- 3 2008 《일본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___김주숙, 김미영, 김양희, 안세희, 정금수, 이향숙
- 4 2008 《생활 속의 협동》
 ___오사와 마리 저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6 2009 《새로운 생협운동》
 ___한국생협연대 엮음 (초판 : 2002)
- 7 2011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___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 김형미 · 김영미 옮김
-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김형미 외
-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___에드가 파넬 저 | 염찬희 옮김
- 10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
 ___일본생협연합회 엮음 | 이은선 옮김
- 11 2012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___오리토이사오와카니시 케이코 저 | 이은선 옮김
- 12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___사이토 요시아키 저 | 다나카 히로시 옮김
-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___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 이은선 옮김
-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___니시무라 이치로 저 |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 15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___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 정광민 옮김
-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___서울특별시
-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___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___김창진 편저
-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2 2015 《사람을 탐하다 : 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___인물탐구동아리 '사람' 저
-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___아너스 오르네 저 | 이수경 옮김
-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
___A.F.레이들로 저 | 염찬희 옮김
- 25 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___G.D.H.코울 저 | 정광민 옮김
-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7 2016 《아이쿱 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___차형석 지음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8 2017 《로버트 오언 : 산업혁명기,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혁신가》
___G.D.H. 콜 저 | 홍기빈 옮김
- 29 2017 《기업 소유권의 진화》
___헨리 한스만 저 | 박주희 옮김
- 30 2018 《스무살 아이쿱 : 협동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실천》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31 2019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___장종익 외 13 저
- 32 2019 《사회적경제의 힘 :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
___마리J.부샤, 다미앙 루슬리에 저 | 이상윤, 윤길순 옮김
- 33 2019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 1권, 2권》
___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편찬위원회
- 34 2019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 효율성에 도전하는 연대》
___티에리 장테 지음 | 편혜원 옮김
- 35 2020 《협동조합 클로즈업 : 만들 땀 몰랐던 협동조합의 어려움》
___김현하 지음
- 36 2021 《IMP 임팩트의 정의와 측정》
___문철우 지음
- 37 2021 《윤리적 소비에서 공정무역마을운동으로 : 아이쿱 이야기》
___김선화·신효진 지음

[연구보고서(일반)]

- 1 연구보고 2007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활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___김주숙·김성오·정원각
- 2 연구보고 2009 《2009년 iCOOP생활협 활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___김아영·정원각·이향숙
- 3 연구보고 201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활운동을 중심으로》
___염찬희·엄은희·이선옥
- 4 연구보고 20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___장원봉·하승우·임동현
- 5 연구보고 2010-3 《생활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___김찬호
- 6 연구보고 2010-4 《2009 iCOOP생활협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염찬희
- 7 연구보고 2011-1 《아이쿱생활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___정해진
- 8 연구보고 2011-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___장종익·김아영
- 9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활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활—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생활—의 동향》
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 10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활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 11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___장종익
- 12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___장상환
- 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 아이쿱생활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염찬희·손범규·지민진
- 14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활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활을 대상으로》
___이향숙·지민진
- 15 생활과 동향 2013-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지민진
- 16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___손범규
- 17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___지민진

- 18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손범규
- 19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손범규
- 20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서진선
- 21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엄은희
- 22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이향숙 · 이문희
- 23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서진선
- 24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지민진 · 서진선
- 2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정은미
- 26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손범규
- 27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지민진
- 28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손범규·이예나
- 29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이향숙
- 30 흐름을 읽다 1-01(2015)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지민진
- 31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지민진
- 32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장재봉
- 33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윤길순 · 최은주 · 서진선
- 34 흐름을 읽다 1-02(2016) 《소비, 근심을 덜다 : 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지민진

- 35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 36 흐름을 읽다 2-01(2017) 《소비, 그리고 쉼(休)》
—지민진
- 37 흐름을 읽다 2-02(2017) 《생활동향연구, 2017.6》
—지민진
- 38 흐름을 읽다 2-03(2017) 《생활동향연구, 2017.7》
—지민진
- 39 흐름을 읽다 2-04(2017) 《생활동향연구, 2017.8》
—지민진
- 40 흐름을 읽다 2-05(2017) 《생활동향연구, 2017.9-10》
—지민진
- 41 흐름을 읽다 2-06(2017) 《생활동향연구, 2017.11-12》
—지민진
- 42 기획연구과제 2017-2 《GMO 없는 사료 도입에 관한 일고찰 : 생협 사례를 중심으로》
—이향숙
- 43 흐름을 읽다 2-07(2017) 《경기와 일상의 괴리 : ‘나’를 찾는 소비》
—지민진
- 44 기획연구과제 2017-3 《아이쿱생협의 공급망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박상선·권영기
- 45 I.B 2018-01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1 :
한국 GMO 보급 및 표시제 현황》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6 I.B 2018-02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2 :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7 I.B 2018-03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3 :
Non- GMO 표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과
시사점》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8 I.B 2018-04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4 :
GMO 이력추적제의 도입 필요성—소비자 신뢰와
위해성 차단의 관점에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9 I.B 2018-05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5 :
BT와 GM 시대, 농업의 진로를 다시 생각한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0 기획연구과제 2018-1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1 기획연구과제 2018-2 《2018년 파머스쿵(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2 기획연구과제 2018-3 《한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일고찰》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3 요약본, 인포그래픽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9) 요약본(인포그래픽)》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4 요약본, 인포그래픽 《2018년 파머스쿵(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2019) 요약본(인포그래픽)》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5 기획연구과제 2019-1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공동체 활동 비교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와 아이쿱생협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6 경제소비브리프 2019-1 《어수선한 한국 경제, 다가오는 변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7 기획연구 2019-02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결정요인 탐색》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8 기획연구 2019-03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9 경제소비브리프 2019-2 《2019년 경제 리뷰—새로운 시대로의 도입》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0 기획연구 2019-04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충성도 탐색》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1 기획연구 2019-05 《리뷰, 한국 생협의 궤적》
(2020)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2 흐름을 읽다 2020-01 《생활 일기 모음집 : 2017~2019》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3 기획연구 2020-01 《가치 전환 시대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4 기획연구 2020-02 《아이쿱생협 조합원 조사 조망, 2006~2018》
(2021)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서(수행연구)]

- | | | | |
|---|------|------------------|---|
| 1 | 2014 | 연구원 리포트 | 《 훗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이향숙 |
| 2 | 2014 | 서울시 기획 연구 | 《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지민진 · 최은주 |
| 3 | 2015 | 기획연구과제
2015-6 | 《 고양파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손병규 · 신효진 |
| 4 | 2016 | 양천구 기획 연구 | 《 양천구 사회경제적 인적 자원 조사
—이향숙 · 김경아 |
| 5 | 2019 | 한국법제연구원 | 《 협동조합 관련 주요국의 입법사례 연구
—박광동 · 김형미 · Hirota Yasuyuki · 강봉준 · 신창섭 · 홍성민 |
| 6 | 2019 | 한국법제연구원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
—김용진 · 김형미 · 최은주 · 신창섭 · 이태영 · 김재원 |

[연구보고서(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 1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이경수
- 2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이경수
- 3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齢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___이경수
- 4 2013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이경수
- 5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이경수
- 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이경수
- 7 2014 2014-13 《이론》《사례》《거버넌스》
 ___이경수
- 8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이경수
- 9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이경수
- 10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이경수
- 11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자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이경수
- 12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이경수
- 13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이경수
- 14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 추진 정책》
 ___히로타 야스유키 지음, 이향숙 번역
- 15 2017 2017-03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 2016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이경수
- 16 2017 2017-09 《사람 중심의 일터 : 사회 혁신 생태계 몬드라곤 사례연구
 :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5》
 ___윤길순
- 17 2017 2018-01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모음집》
 ___윤길순

- 18 2018 2018-02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__가자가지살롱협동조합
- 19 2018 2018-03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2》
__가자가지살롱협동조합
- 20 2018 2018-04 《협동조합 과세 :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
__번역협동조합
- 21 2020 2020-01 《농업과 푸드시스템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__이미옥
- 22 2020 2020-02 《채식 위주의 식단이 주목받는 이유
: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2》
__이미옥
- 23 2020 2020-03 《유기농을 넘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농업방식
: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3》
__이미옥
- 24 2021 2020-04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 패키징의 해법을 찾아
: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4》
__이미옥
- 25 2021 2021-01 《농식품 부문의 탄소중립 라벨·커피
: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5》
__이미옥
- 26 2021 2021-02 《농식품 부문의 탄소중립 라벨·초콜릿
: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6》
__이미옥

《생협평론》독자님들께 알립니다

2021년 겨울호(45호)를 끝으로 《생협평론》은 발걸음을 멈추고자 합니다.

2008년 첫 준비호를 거쳐 2010년 겨울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생협평론 편집위원회는 협동과 나눔, 평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영역이 성장하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하고자 노력했지만, 그 사이 사회는 더 숨가쁘게 변하고 사람들 사이의 소통 방식도 훨씬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협평론》은 여기서 멈추지만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말을 걸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생협평론》을 사랑해주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동안 발간된 《생협평론》은 인터넷 서점이나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 낱권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이후의 《생협평론》 특집 글을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정기구독료 환급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문의 : 전화 070-4714-5712 이메일 icoopinstitute@gmail.com